

대형화되고 권위주의화됨으로써 우리의 공적 사회가 위계질서적 권위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업무나 경영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직을 대형화하며, 개인들은 관료조직 속에서 기계적으로 직업적으로 어진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제의 권위와 명령에 순응한다. 이러한 관료조직은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조직이며 독재자의 권위와 명령을 뒷받침하는 통제적 조직이다. 비대해지는 관료조직은 민주정치 행정을 위한 대인 봉사주의의 위계질서의 위계질서를 축소하고 간소화하지 않는 한 군사주의문화의 위계질서의 위계질서를 극복하기 어렵다.

강력한 지도자 중심의 위계질서적 문화는 봉건적 왕권사회의 관료조직과 그것을 뒷받침한 왕권사회의 관료조직과 그것을 뒷받침한 가부장제 종족조직의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다. 왕에 대한 충성과 부계조상에 대한 효도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전통사회의 윤리는 군사정권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의 지배이념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조직에도 계승, 유지되고 있다. 정당조직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들의 주체적 참여와 지도자들의 민주적 역할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의 정당조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개인보스를 중심으로 정파조직, 정당조직이 이루어지며 흔히 분당, 파당의 분열이 발생한다. 정치이념이나 정책시행을 위한 충성보다는 개인보스에 대한 충성과 친밀성으로 조직을 이루며 내적 위계질서로 단결과 통제를 하게 된다. 보스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충성과 친근한 정도에 따라 위계질서가 형성되며, 형적 연대나 개방적인 인간관계는 배제된다. 이런 개인 보스중심의 당파성과 위계질서는 부계시조나 4대조를 중심으로 부계종족집단의 위계질서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즉 가부장제 문화를 정치적으로 재생산한다. 가부장제 우주관과 가족관은 개인, 가족 및 친족의 시작과 근본을 부계 시조나 특정조상인 한 남성 개인으로 귀착시킨다. 그 조상이 집단의 시작이며 개인의 뿌리가 되고 자손들은 그를 중심으로 세대의 손수에 따라 신분 지위가 결정되며, 존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여성을 완전히 배제한 종족조직으로서, 여성은 혈통계승을 위한 자손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재생산수단으로 예측될 뿐이다. 여성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남성중심의 문종조치의 문화행태가 정당조직과 당파성에서 재생산되며 이런 정치풍토에서

로 동원하며 착취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적 삶을 해체하고 대중을 개별화시켜 생산노동과 소비시장의 노예로 종속시켜가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민중 여성들은 소외와 무력함을 느낀다.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민족을 자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에서 생명보존과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요구와 노력은 개별적 차원을 넘어 각 분야에서 공동체의 조직과 연대로써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다. 공동체운동의 확산으로써만이 죽음의 군사주의문화와 차별적 가부장제 권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는 말

물질과 권력의 독점을 위한 경쟁과 착취, 전쟁과 방위를 목적으로 삼는 이익사회 현실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시작되고 있다.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반진보해 평화운동, 공해 추방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및 기타 여러 형태의 민중 민주운동과 여성운동은 분단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주의문화와 독점자본의 파괴성과 폭력성에 대응하려는 자주적인 노력이다. 이체는 군사적인 나라 살림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더욱 높여 한반도와 민족을 살려나가는 나라 살림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가정 살림을 담당한 우리 여성들은 나라 살림에 있어서 의·식·주를 위한 가정 살림을 안정시키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권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전인적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과 제도 등을 마련하는 정책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과 행정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녀와 노쇠한 부모를 위한 생활 보장과 복지가 나라 살림에 의해 좌우되는 데서 여성들은 주부로서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과 집행을 주시하며 감시해야 한다. 해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위해 세입 목표

여성이 주권자로서 정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VI. 군사주의문화와 가부장적 국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군사적 관료주의와 위계질서문화는 바로 계급국가의 가부장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성을 국가 공적 부문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한 가정에 예측시켜, 사적 존재로 소외시킨 가부장적 국가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독점자본주의와 결부되어 여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군사산업화는 국가 권력을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시킨다. 경제성장파 산업생산이 오늘날과 같이 파멸적인 핵무기 생산과 환경파괴적인 소비 상품의 대량생산 단계로 치닫고 있다. 즉 국가의 살림살이가 생명 재생산과 보존을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영위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정복하고 독점하려는 무기와 기술의 생산과 방위에 치중되어 있다. 생명 재생산과 보존을 위한 공동체적 삶의 재생산은 핵가족의 사적 책임으로 주변화되고 소외된 여성의 소비 역할로 완전히 분리당하고 있다. 남성중심의 정치경제는 이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힘의 구조의 재생산을 위해 군사산업을 뒷받침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목적이 민족공동체를 살피기보다 죽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원시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처자와 씨족의 생명과 삶을 자연과 적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고 방어하였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안위와 재생산 집단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남녀가 함께 생산적 노동을 하여, 어린 자녀들과 노쇠한 부모형제를 돌보며 살았다. 그러나 침략과 정복을 일삼는 군사주의와 계급국가에서는 공동체의 재생산이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으며, 남성은 국가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생산과 국방을 담당하는 공적 역할담당으로 양극화시켰다. 가족을 위한 여성의 재생산노동은 가치없는 사적 노동으로 전락되고 공적 역할의 참여에서는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독점자본 기업체는 군사권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성장파 상품생산에 남녀 노동력을 차별적으로

액을 훨씬 웃도는 남세성적을 올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세자들이 되었다. 남세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을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책략에 좌우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일임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해야 한다. 나라 살림인 국방비를 줄이며 우리의 이웃과 내 가정의 살림살이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며 정치, 경제적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을 말하면서도 경쟁적이고 게교회, 교단 중심의 분파, 분열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을 배출해내는 본거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탄생된 기독교인의 전부성은 곧바로 타종교, 복한체제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발전되어, 이들을 정복하여 승자가 되려는 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이다.

평화와 통일의를 열기가 뜨거운 이때, 교회의 권위주의적이고도 반통일적 요소의 극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교회의 교육은 평화 교육이어야 한다.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해갈 능력을 지닌 기독교인으로 키워내야겠다. 적대감과 우월감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화해, 돌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교회구조는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즉 청년과 여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활성화시켜야겠다. 한편 일반 신도도 교회예배와 기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험적인 예배, 비권위적 작은 교회운동, 민중교회, 평화교회의 확산을 통해 기존교회를 개혁하려는 모델을 제공해야겠다.

셋째, 신학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신학, 민중신학, 토착화 신학을 받아들여 한국 사회의 현실에 교회가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기독교 중심의 '전세계 복음화' 운동에 은폐된 현상유지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고발도 포함된다.

넷째, 교회의 경제정경의 실현되어야 한다. 헌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함께 교회기금의 사회환원을 통해 경제정의, 회년정신을 실현시켜야겠다.

■ 번역논문

군사주의\*

마루야마 마사오

군사주의(militarism)라는 개념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서 흔히 그것 때문에 논의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 민족주의나 파시즘의 개념은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는 같으면서도 어쨌든 분명한 운동이나 정치체제로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데 비해서 군사주의의 경우는 한층 더 애매하여 '주의'로서의 특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상식적인 용어로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의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학문적 노력은 국내의 모두 아주 빈곤하며 그런 주제가 달린 책의 대부분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연구였다. 군사주의의 사회화 내지는 정치학적 분석은 아직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전개할 이야기는 결코 학계에서 공리(公理)로서 통용되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 군사주의에 대한 정치적적 접근의 하나의 철계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개념구성에서 이탈된 "엄밀한" 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일반적, 상식적 용어법에서 이탈된 "엄밀한" 정의(定義)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언어의 역사적 경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가능한 한 선별해냄으로써 다른 비슷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별과 관계를 다소라도 명확하게 하려는 데 있다.

\*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1984, pp.285-291을 번역한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주의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한 국가 또는 한 사회에서 전쟁 및 전쟁 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반항구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국민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사상 내지는 행동양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강력한 군부의 존재나 대외정책의 호전성이라는 것만으로는 군사주의를 성립시킬 충분한 조건이 안된다. R. H. 토니아가 말하듯이 "군국주의는 어떤 군대의 특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특성" (Augsitive Society, 1920, p.44)으로서 그 특성은 사회라 총에 침투되고 있는 특정한 사고양식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또한 그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사회경제적 구성체가 아닌 것은 물론이요, 민주주의와 같이 정치체제 전체를 덮는 개념도 아니다. 군사주의는 "주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체제와 결부되어 존재해온 하나의 "경향성"으로 어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이, 또는 보다 덜 나타나 는 군국주의적인 요소이다. 사람들은 보통 스페르타의 군국주의, 로마의 군국주의, 19세기 프러시아의 군국주의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근대 군사주의, 특히 고도 자본주의하의 군사주의는 고대나 중세의 군사주의와의 공통성과 동시에 현저히 상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I. 근대 군사주의의 역사적 전개

근대의 군사주의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성립되었다. 첫째로는 절대주의 군주에 의한 상비군(Standing army)의 창설이며, 둘째로는 미국 및 불란서혁명에 있어서의 국민 혹은 대중군(Mass army)의 등장, 셋째로는 나폴레옹 이후의 국민군의 판묘화 과정이다. 절대주의시대의 상비군은 주로 상급귀족에 의하여 구성된 장교단과 국적의 구별없이 징집된 용병으로 구성되었다. 귀족은 본래적으로 고립적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기사도정신을 이 상비군 조직 속에 가지고 들어왔고, 거기서 1) 희생, 충성, 헌신, 용감과 같은 도덕이나 특수한 "영예" 관념, 2) 군사적 영웅의 숭배, 3) 군도, 군복, 무기 등의 상징에 대한 존경, 4) 산업이나

부역 내지는 생산노동에 대한 멸시, 5) 위계제에 근거한 거리감의 존중 등 일반적으로 군사주의를 특징짓는 관념들을 근대 정신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독립전쟁과 불란서혁명의 경험은 정신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의 필요, 기술적으로는 소수 정예주의에 대한 대량 압도기술의 우위를 증시하여 여기서 소위 국민총무장(Nation in arms)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근대군사주의는 이러한 새로운 국민군의 관념에서 혁명적 성격을 빼내고 앞에서 말한 구(舊)군대의 신분적 이데올로기를 국민적 규모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동향에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19세기초의 반(反)혁명과 결부되어 각국에서 성장되었다. 특히 거대한 상비육군을 가진 대륙국가들로 아래로부터의 부르조아혁명을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전환하였고, 견고한 봉건적 용커의 지도 아래 근대화를 진행했던 프러시아에서 전형적으로 성숙한 형태를 취했다. 일본의 군국주의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자란 것으로 다만 무사(武士)계급의 오랜 정치적 지배와 "상무(尙武)" 정신의 전통이 보다 호적한 토양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근대의 전쟁기술은 고도의 조직성과 기계성을 요청함으로써 국민군의 양성은 국민의 지적 수준의 어느 정도의 향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군사주의는 합리적 비판정신의 성장을 억제하고, 맹목적인 절대복종의 정신을 짊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대체로 국민 사이에서 기술적 지식의 보급과 정치의식의 성장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하는 곳일수록 군사주의가 성장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군사주의는 대중국가와 민주주의의 괴리에서 태어난 기형아이다.

II. 근대 군사주의의 양상들

근대 군사주의는 전근대적인 기계 시대의 요정에 의해 변질된 것이므로 시대착오적인 양상과 현대적인 양상이 기묘하게 결합되고 있다. 이런 모순된 결합은 전쟁이 전체 전쟁(총력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 더 현저해진다. 군사주의는 더 이상 오만하게 대중을 굶어보고 있



을 수는 없게 되었고, 오히려 전력을 기울여 자신을 대중에게 선전,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군사적인 상징은 이제 자연발생적인 명예심의 표현이나 의자에 대한 시위보다는 오히려 국내용의 선전에 봉사하게 된다. 화려한 군복, 멋진 계급장과 훈장, 웅장한 군악대, 이것들은 전투의 목적이 아니라 주로 대중의 허영심을 선동하고 “우리의 군대”에 대한 자부심과 선망을 불러일으킬 필요에서 요청된다. 군대적인 조직-엄중한 위계질서, 권위주의, 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이 가장 모범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간주되고 다른 일체의 사회관계(예를 들면 노사관계)는 이것을 모범으로 하여 형성된다. 군인교육은 교육 일반의 이념이 된다(문약(文弱)의 배격). 한편에서는 전우애가 찬양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스파이조직이 그물처럼 쳐진다. “독일국민은 바로 지금 올바른 생활양식을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행진하는 부대의 형식이며, 그때에 이 행진부대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어떠한 독일인도 자신을 개인으로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독일적 생활양식의 표징이다” 라는 나치스의 이데올로기가 말해주듯이(A. Rosenberg, *Gestaltung der Idee*, p.303) 파시즘의 전체주의에서 우리는 근대 군국주의가 도달한 최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양자가 정치적 및 군사적 수단의 물신숭배라는 점에서 내면적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 III. 군사주의의 침투과정

군사주의의 직접적 발전소는 군부이다. 그러나 군부는 그 자체가 국가권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수직업집단으로서 국민적 기반이 없다. 따라서 군부는 이런 군부의 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사회적으로 군사주의를 선포하는 순(順)민간단체나 반관반민단체(半官半民團體)를 필요로 한다. 그런 사상적 나팔수로서 흔히 활약하는 단체가 제향군인회, 애국단체, 군인원호나 군사연구를 표방하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청년단, 소년단조직 등이다. 특히 근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부를 제외

‘국력’이 어느새 군사력과 동치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A. 바츠(Vagts)가 군사주의를 “군형감각의 상실”이라고 평했던 것은 옳다(*History of Militarism*, 1938, p.135). 특히 이런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경제와의 관련이다. 그것은 원래 군사주의가 자기의 경제적인 존성을 의식하지 않고서 거꾸로 생산노동을 멸시하는 무사(武士)·기사(騎士) 계급의 정신과 행동양식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더욱이 근대 문명의 고도화와 함께 국가 기능의 상호의존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군사기술의 진문화에 따른 군부의 파벌주의가 전통적 군인정신과 유착되어 군부 내지는 군사조직의 자기애적인 경향은 근대국가에도 강인하게 잔존하고 있다. 이같은 수단의 자기 목적화는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에 본질적 모순을 초래했다. 물드케는 “전쟁이야말로 하나님님이 세계질서를 유지하시는 뜻이다. 전쟁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덕을 발휘하게 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세계는 물질주의에 침전해 버렸을 것이다” (1880년 12월 브른체리에게 보낸 서한)라고 했다. 이는 모든 군사주의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모순을 말한 것이며 이것은 그것의 반대물로 진화할 속명을 가지고 있다. 즉 군인 정신의 고양은 군의 규격성, 최일성의 요청으로 가장 물질적이고 비개성적인 “인원수”로 나타나고 있다. 회화화(戲畫化)된 형태가 일본의 ‘황군’(皇軍)에서처럼 계급장, 칼러나 대님 등을 다는 법이나 담요의 정돈 같은 것에 대한 아주 사소한 형식주의로 나타난다. 나아가 군사주의가 선전하는 국가적, 국민적 특수성은 군사력을 우월성의 규준으로 함으로써 전혀 질적 규정을 잃고 병사량(兵士量)의 차이에 귀착한다. 일체를 근대의식으로 칠해버리는 “군사주의적 국가관의 정점으로서는 전쟁은 동시에 국민적 차이의 최저점”(G. 러드볼트, 『법철학』, p.301)이다.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균형을 상실한 군국주의는 표면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견뎌내는 강인함에서는 뜻밖에도 낙약하며 일단 하강선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붕괴하는 것은 일본이나 독일의 예를 보아도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전쟁과 침략에 결부되어 있으며, 몰락의 동반자로 자기 국민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 국민도 파괴적인 지경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 “규율있는 발광상태”(카알 리브크네히트)로서의 현대군사주의의 최대의 화근이 있다.

한 현역 군인의 정치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이들 단체는 군부를 대신하여 공공연한 정치운동을 통해 군부세력의 중대에 공헌하고, 군사주의에 대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세력의 저항을 타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그들 배후에는 대소 군수자본가가 있어서 자금을 제공하며,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경영하여 군사주의의 열기를 선동한다. 이들 “죽음의 장사관” 범주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자본가도 증대하는 노동자계급의 반항에 직면하면 노사관계의 군사적 규제에서 이익을 감지하여 많은 적은 군사주의 지지에 기울어지게 되며, 한 나라의 경제가 전시(戰時)나 준전시체제로 편성되면 필수품, 개인으로서는 반(反)군사주의인 자본가도 기구적으로 군사주의에 헌신하는 일을 부득이 하게 된다. 그러나 군사주의의 침투에는 또한 대중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받아들일 자제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군대라는 폐쇄적 특권적 계층은 사회적 승진의 길이 막힌 하층민에게 있어서 흔히 명예와 권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고도자본주의하에서 「도시」로 상징되는 기계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질투와 선망을 가지는 농민은 기계화된 군대에 들어감으로써 좌절을 치유한다. 또 거꾸로 도시의 소시민으로 기계적인 생활을 견딜 수 없어 단조로움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역시 군대 생활이나 국민 생활의 군사체제하에서 자극과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사주의의 최대의 희생자인 노동자 계급조차도 공장 폐쇄나 대량 정리의 위협이 만성화하면 기업의 전면적 군사적 편성에서 ‘안정’에의 희망을 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군사주의 자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하지만 그것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반군사주의나 평화주의이데올로기의 고취만으로는 부족하다.

### IV. 군사주의의 내재적 모순

군사주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력과 군대정신 그것 자체를 목적화하는 것이 현저한 특성이자, 국민 생활의 “하나의” 분야에 지나지 않는 군사적 배려가 다른 모든 분야를 압도하여 비대해지고 종합적인 힘으로서의

### ■ 번역논문

#### ‘람보’의 극복\*

-여성과 군사주의화된 남성다움의 다양한 형태들-

C.H. 엔로우  
박영주 역\*\*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진복시키고 코라손 아퀴노가 권좌에 오른 혁명이 있는 지 몇 개월 후 어떤 영국 여자친구가 내게 새로 나온 한 권의 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혁명 후 돌변하는 사건들에 관해 쓴 것이었다. “이것 봐! NPA계열자들이 투손산 위에서 어떤 비디오를 봤는지 보라구! 람보!” “웃기지 마” 하고 나는 응수했다. 자신있게 나의 여자친구는 그게 정말이라고 고집하더니, 그 책 한 권을 내게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후 책을 받아 나는 즉시 다른 모든 책을 제쳐 두고 생생하고 흥미있는 그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 책에는 ‘람보’ 비디오에 대해 설명하는 필리핀의 젊은 남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한 마디로 기가 막혔다! 어째서 이 기사가 나에게 그렇게 도착적인 만족을 불러 일으켰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 함께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여성들, 특히 여성해방주의자들이 신속한 군사화에 대항하여 국제적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행동방법에 대하여 진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Antimilitarismus information(1987.8), pp.123-35를 번역한 것이며  
\*\* 박영주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중(조직신학)에 있음



## 평화, 여성 그리고 안보

###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reformulation)<sup>1)</sup>

황 영 주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강사)



#### “지구는 내가 지킨다” 내가 본 어떤 신문 광고 : 글의 시작

내가 한 조각 신문에서 이 광고를 보는 순간 무척 '불편'하였지만 (하지만 그 불편은 곧 극복이 되었는데), 곧 이 광고를 글의 은유로 사용하고픈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광고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명백하게, 아울러 모순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으로 이 광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군사화된 사회코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광고는 자연화되고 일상화된 군사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성들의 세신(刷新)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 광고가 갖는 자기 모순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자기 전복을 함께 본다.

#### 군사화된 사회

한편으로 나는 이 일상의 광고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고 있

1) 이 글은 지난 5월 22일 민주평통 여성위원회 <여성과 평화>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당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정연정 선생님 및 이현숙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위의 신문광고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신 신세계 백화점의 관측팀 및 세인기획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는 거대한 군사주의, 군사주의에 대한 숭배, 군사화된 안보,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군사화된 사회화 등을 목격한다. 우선, 이 광고는 우리 문화가 가진 자연화되고 일상화된 군사화를 직설히 표현하고 있다. 광고 속의 아이가 진사의 흉내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는 군사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군사화는 교묘한 과정이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는 집중적인 군사화 과정과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전전(戰前)' 또는 '전후(戰後)' 또는 '전쟁 동안'에도 군사화는 이루어진다... 실제로 어떤 것이든 군사화될 수 있다. 장난감, 결혼, 과학적 연구, 대학의 커리큘럼, 모성, 이 모든 것들이 군사화 될 수 있다(Enloe 1993, 100 권인숙 2000, 149-150에서 재인용, 강조체는 필자에 의함).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군사화된 특징은 통계 혹은 실증적 자료로서 증명되기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역설적으로 표현된다. 한국사회의 군사화된 특징을 통해 오늘날의 군사화된 사회를 엿보자.

권인숙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미국인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서 비무장지대 근처의 부장군인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군사적 긴장감이 절로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도 별 이상할 것이 없는 모습들이 저렇게도 느껴질 수 있구나 싶어 놀란 적이 있었다”(권인숙 2000, 151). (인로의 제자인) 권인숙씨는 인로가 지적한 사회구성체로서 군사화 과정에 기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한국인이기 때문에) “별 이상할 것도 없는” 군사주의에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여, 군사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권인숙씨조차도 자신이 군사주의가 횡행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군사주의의 일상화·자연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휴전선, 군대, (비)무장지대와 같은 명시적인 군사 노출만이 이 사회가 갖는 군사화된 관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군사주의는 보세혈관처럼 전체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사고한다. 고로,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군사문화적 언어는 곧 군사문화적 사고의 반영이다”(조선일보 2001년 5월 12일자 38면 “군사용어는 이제 그만”)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은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군사성에 대하여 적절히 지적한다. ““교과서가 없어? 전쟁터에 나가는 길이 총을 들고 와? 완전히 군기가 빠졌구먼, 방과 후 단체기합! 억울해? 불만이야? 너희들이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란 것 모르나?” 학교에 다닐 때 지겹게 들던 말이다”(조선일보 2001 5/12, 38면 “군사용어는 이제 그만”).<sup>1)</sup> 그래서 이 여성의 지적대로 한국 ‘사회’는 명시적인 전쟁터는 아니지만 묵시적인 전장이다. 묵시적인 전장은 보다 군사적이다. 한국 사회는 승리와 패배만이 존재하고, 흑과 백만이 존재하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군사주의에 의하여 구조화된 폭력은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것에서 더욱 강화된다. 감동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 복지, 정체성 및 자유로 구별되며 이러한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진한다(Galtung 1990, 이재봉 1996, 87-88에서 재인용). 정치적 자유, 인권, 사회 복지 등 거창한 요구(또는 욕구)와 같은 것의 보장이 아닌, 사소한, 이를테면, ‘보행권’ 같은 것에 대한 무관심은 바로 이 사회가 가지는 군사화된 관행과 별로 무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보다 복잡한 코드로 확대 재생산된다. 개인적인 인권은 안보를 위해서 유보될 수 있다. 개인주의는 전체의 난

1) 여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양삼석, “한국군사정권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신문기사에 나타난 군 관련용어의 사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 (1996)을 참조하라.



함을 꾀다. 집단성과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군사주의는 그래서 사소한 것이 늘 무시된다. 우리가 갖는 일상적인 관행과 실제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늘 개인이나 소수보다는 집단을 강조했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화해와 평화보다는 긴장과 갈등을 앞세워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광고에서까지 자연화되고 일상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고 있다.

### 전복의 도구<sup>2)</sup>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 광고에서 역설적인 (여성들의) 의무(또는 권리)를 발견하게 된다. “지구는 내가 지킨다”는 커다란 제목 하에 장난끼 어린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우리가 옆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통아이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나의 8살짜리 아이였다. 나에게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아이는 희망과 꿈과 연결된다. 아무리 군사화된 담론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이것이 다른 여성적인 의무(양육)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발견하게 된다. 지구는 내가 지킨다라는 군사주의 담론과는 달리,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전투’ 로봇 위로 초월하여 걸리고 있다.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날아 푸른 하늘을-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이에게 걸 수 있는 어머니의 희망을 부추긴다. 군사화된 담론이 횡행하는 곳이라도 어머니, 나아가서 여성은 “어린이 날 만큼은 어린이 세상으로 만들어”줄 의무를 지닌다. 어린이 세상은 우선 총과 전투헬멧이 필요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군사주의보다는 아이들의 순수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어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이 광고가 갖는 (광고를 만든 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전복성에 대하여 주목한다. 광고 안에서 지구를 지키는 기대한 군사주의적 공격과 어린이 날 만큼은 어린이 세상으로 만들어줄 소박한 의무는 서로간에 갈등하고 정치적 담론으로 진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군사주의적 공격을 여성이 갖는 작은 의무로 방어하거나 혹은 극복할 수 있는 저항을 함께 발견한다. 아울러 여성이 지구를 지키는 행위는 전투적이고 갈등적인 방법이 아닌 여성(의 존재)이 가진 특질을 표현·보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용인 된다.

### 이 글의 목적과 구성

이 글에서 나는 국제정치학의 논의에서 여성과 평화가 서로 연결된다는 접근 방법은 오히려 기존의 젠더화된 이분법 및 가부장제적 질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일부 페미니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적극적 평화, 즉 포괄적 안보 개념을 통해서 여성의 힘갖추기로 대체하고자 한다. 여성의 포괄적 안보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기존의 젠더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사회에서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내 주장의 요체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한편으로 너무나 여성적인 하지만 너무나 본질적인 여성과 관련된 우리사회에서 발견되는 젠더화된 사회적 구성을 살피면서 이를 통해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것이 기존의 젠더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여성의 수동성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 이 글에서의 전복 전략에 대한 논의는 Molloy, “Subversive Strategies or Subverting Strategy? : Toward a Feminist Pedagogy for Peace” *Alternatives* 20(1995)에서 출발한다.

지구는 내가 “지킨다”는 의미의 수정에서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포괄적 안보에 대한 국제관계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한 다음, 그것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부분은 여성과 평화가 수동적이며 젠더화된 구성에 의존하고 있다면, 여성과 (새로운) 안보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주체적인 힘 갖추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너무나 여성적인 그러나 너무나 본질적일 수 있는

#### 유교, 근대성 그리고 군사주의: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계보학

다시 광고로 돌아가 보자. ‘지구’는 ‘내가 지킨다’라는 광고의 카피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주의적 담론이 숨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카피에는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을 함께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대의명분과 관련된 점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성과 관련되는 국가이데올로기로서 유교주의가, “내가”는 서양의 주체적인 근대성의 형성에서 인식론적으로 현상학적 주제에서 소외된 여성의 타자화가, “지킨다”는 군사주의가 구성에 있어서 젠더화된 가부장제적 질서를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억압, 소외 및 이용과 관련된다.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근원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듯이 유교의 국가이데올로기 수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교가 가진 본래의 원리는 여성을 하위에 두거나,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조선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수용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여성의 부덕은 바로 국가의 흥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조선조의 지배계급은 여성에 대한 (도덕적) 통제가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가 무너지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중법 가장제 사회에 있어서는 막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중법 가장제의 국가 질서를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원리가 오류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 윤리와 가족, 국가, 하늘의 관계를 수용이기 때문이다”(김혜숙 1993, 45). 달리 표현하여 여성과 여성의 부덕(婦德)은 유교적 이념 자체의 수호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했다. 아울러 조선 중·후기 가부장제의 강화는 다시 한번 국가의 안정성(stability)과 관련된다. 특히 정질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다. “조선시대에 있어 삼강오륜의 체계화립은...개인의 몸을 수양하는 도덕적인 원리의 체계나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확립여부에 국가의 존폐가 걸린 중대 문제였던 것이다”(김혜숙 1993, 48).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결국 여성에 대한 배제로 바뀌어 갔고 그것이 오늘날 여성에 대한 젠더화된 사회적 가치의 계보학을 제공한 것이다.<sup>3)</sup>

여성에 대한 차별은 비단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여성에 대한

3) 이와 관련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 있다. 흔히 유교가 성차별에 대한 전통적인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것, 예컨대 “예전부터 그러하니까” 하니까 하는 태도는 결국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구성된 코드라는 것이다. 양현아에 따르면, “전통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승된 삶의 양식이며 의미의 코드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전통으로 인정되면 시간의 경과를 거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구조와 규범 등 여러 조건 속에서 그 존재가 요청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양현아 1999, 215 강조체는 필자에 의함).



차별은 뚜렷했으며, 그러한 차별은 역설적으로 나(주체/subject)를 강조하는 근대성(modernity)의 확장과 더불어 오히려 강화되었다. 근대의 프로젝트로서 인권, 자유, 이성, 평등의 가치는 남녀 구별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오로지 백인 남성에만 국한된 것이고 여성들은 주변에만 머물렀다고 지적된다. 페미니즘그림에서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좋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반항적인 딸의 울음”으로 표현된다. 계몽사상(좋은 아버지)의 여러 가치가 자유, 평등, 자기실현 등의 이념을 강조하고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근대인들에게 -물론 남녀구별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반면,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스트학과 (반항적인 딸의 울음)는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반하여 서양의 전통에서 여성은 오직 주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게 된다(Benhahib 1991, 130). 이들은 근대(성)의 기초가 되는 이성, 지식 및 자아의 개념 등이 이미 성별차별의 개념에 기초하였다고 강조한다. 쿨(Coole)은 서양의 문화 근저에 존재하는 것은 (수동적인) 여성적 부분과 (우위의) 지배적인 것으로 나뉘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바로 남성성이 형이상학과 주인(mastery)으로 다루어진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Coole 1993, 197). 이러한 점에서 근대 또는 근대성은 여성의 소외와 연결되며, 근대성의 표현에서 남성성(masculinity)은 객관성, 이성, 자유와 질서로 동일시되는 반면에, 여성성(femininity)은 주관성, 느낌, 필요성과 혼란으로 격하된다. 요컨대, 근대(성)의 사회구성 과정은 백인 남성들의 관심, 백인남성들과 동일시하는 실제일 뿐만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화되어지는 성적분리의 과정이다(Peterson 1992, 197).

군사주의는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통제를 수반한다. 군사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젠더 위계질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군사화 과정은 이러한 관련성을 통해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군사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끊임없이 이분화시키고, 그 사회 속에서 살고있는 여성에게 젠더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면서 다시 한번 이왕의 젠더위계질서를 강화시킨다(오미영 2001). 군사주의의 여성에 대한 젠더화된 역할을 강요는 여러 수준의 폭력에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다(오미영·황영주 2001). 젠더화된 직접적 폭력에서 군사주의는 여성을 주로 성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 폭력의 가장 적나라한 형태이다.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보호대상이 되지만,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폭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희생자가 된다. 비탄 전시에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 강간(위안부, 민중말살식 강간)과 성폭력은 평시에도 군대를 유지하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남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매매춘, 레크레이션\*강간). 아울러 여성에 대한 군사주의의 제도적 폭력은 여성을 군대조직 자체에 매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성은 군대조직은 남성다움과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조직으로 유지시키려 하며, 이에 따라 여성을 군대조직에 포함하는 것을 꺼려한다. 설사 여성의 존재를 군대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변적이거나 하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남성이 군대에서 복무를 한다는 것은 완전한 시민권의 향유, 이를테면 남성 전사(the man-warrior) 모델을 통해 젠더화된 시민권 개념의 기초가 되며, 이때 여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데올로기적 폭력은 군사화를 통해 성립된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무의식적·자발적 동의 과정을 마련한다. 이 폭력은 위에서 살펴본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상당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지속,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폭력은 주로 국가안보 및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서 기존 질서, 특히 가부장제적 군사 질서를 옹호하게 된다(오미영 2001).

##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방법의 젠더화된 구성

(국제)정치(학)에서는 평화를 ‘상당적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로 전제하고 있지만, 평화 자체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평화는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정치학 개설 과목 명칭이나 정치학 내의 전공 분류에서도 ‘안보 및 평화’만 ‘갈등과 평화’처럼 습관적으로 평화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평화란 전쟁만 없으면 되는 것이며 전쟁의 반대가 곧 평화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소극적 평화론(Negative Peace)은 결과적으로 분쟁이나 전쟁 갈등을 연구하면 평화는 저절로 연구되는 것이라는 상식을 낳는다(박주식 1996, 1).

평화는 전쟁의 방지라는 국가노력의 산물로 수동적으로 비추어진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에 있어서 국제정치상의 평화 도출하는 방법은 군사/전략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국제정치학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세력균형(the balance of power), 패권국가이론(the theory of hegemonic power) 및 성숙한 무정부(the mature anarchy) 등의 현실주의적 대안은 군사적 안정, 또는 최소한 전쟁의 회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주장의 요체가 된다. 전쟁의 부재라는 개념은 서구의 역사 전통으로 볼 때 평화를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서 연유한다.

일부 페미니스트 평화 연구가들은 여성과 평화는 상호간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리어돈(Readon)같은 이는 “가치체계로서 페미니즘은 군사주의의 대칭물(antithesis)” (Readon 1984, Pettman 1996, 113에서 재인용)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브록유티(Brock-Utne)는 여성과 평화의 관련성은 세가지 선제, 즉 비폭력, (아동에 대한) 생명보호 및 진이정치(trans-political)적 행동에서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브록유티는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주로 평화적인 가치를 위해, 남성은 주로 전쟁을 위해서 교육된다고 주장한다(Brock-Utne 1990, 32, Pettman 1996, 113에서 재인용). 이들 주장의 요체는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성들보다 평화로운 존재라는 주장, 또는 여성은 주로 양육을 경험하고, 공적인 영역활동 기회가 적기 때문에 평화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Stearns 1998, 118). 이들은 또한 만약 여성들이 평화운동에서 조차 활동하지 못한다면 여성이 설 공적인 영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배제된다고 강조한다(Stearns 1998, 120).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평화를 규정하는 전쟁/평화, 적극/소극, 활동/비활동적이라는 이원적 대립관계(the binary opposition)는 서구사회가 가진 근대성의 구성원리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는 또한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계되는 젠더의 구성방식과 동일하다는 점

4) 페미니즘에서 여성과 평화에 대한 연구성향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첫째, 남성은 전쟁과 관련되고, 여성은 평화와 관련되어 여성이 평화구성에 도덕적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둘째, 남성의 폭력에 대한 독점이 폭력 그 자체보다 문제가 된다는 주장; 셋째, 여성이 평화와 관련된다는 주장과 사회에서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반군사주의적 접근(anti-militaristic approach)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Mary K. Burguières,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19(1), (1990)을 참조하라.



이다. “서구적 젠더의 이해는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 이원적 구별에 기초한 것이다. 예컨대 공과 사, 객관과 주관, 자신과 타자, 이성과 감정, 자율성과 의존성 및 문화와 자연이 바로 이원적 구별의 예라 할 것이다”(황영주의 옮김 2001, 24). 이러한 분류에서 앞의 것은 대개 남성적인 특징과 관련되고, 뒤의 것은 여성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구별의 위계적인 구성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존속시키는 고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만든다”(황영주의 옮김 2001, 24). 이러한 주장을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와 관련시키면 전쟁은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분야가 되어 남성적 특징으로, 반면 평화는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것으로 여성적 특징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될 때 전쟁과 평화 이원적 대립은 결국 젠더의 구성방식과 동일해진다. 그것은 다시 남성이 원하고 만들어 낸 세상으로 재구성된다(Tickner 1999, 46).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거나 여성의 평화적 우위성을 주장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여성과 평화를 서로 관련시키는 것은 여성의 무리울 갖지 못한 상태(the disarmed condition) 때문에 단지 여성들에게 수동적으로 부과된(imposed) 것에 불과하다...”(Carroll 1987, 149-169, 황영주의 옮김 2001, 86에서 재인용).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 실버스터(Sylvester)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러한 입장주의자(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y)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만약 여성을 평화와 등치하면 첫째,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에서 타파하려는 능동적인 여성 또는, 일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둘째, 여성들을 일원화되고 수동적인 타자(homogeneous and passive other)로만 인식하게 되고, 셋째, 어머니가 아니거나 양육자가 아닌 여성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게 되어 오직 “성적 차이의 가부장제적 구성”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한다(Sylvester 1993, 110). 그녀의 주장은 “대부분의 세계질서에 실려있는 남성위주의 젠더관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세계질서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질서를 바랄 수 없다”(Sylvester 2000, 3)는 맥락이다. 볼딩(Boulding)의 경우는 평화운동 여성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그것이 남성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화운동 및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고 평화운동이 페미니즘적 전략과 결부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다(Boulding 1982, 34, Pettman 1996 113에서 재인용).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평화연구 경향이 주로 군비통제 및 분쟁관리(conflict management)로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접근은 결국 권력관계, 특히 젠더관계(gender-relations)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Northrup, 1994, Pettman 1996 114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평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먼저 탈현실주의 평화론에서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보전되는 (것이) 진정한 발전으로 보는 적극적 평화론(Positive Peace)은... 정의로운 국제사회질서를 평화의 필수 조건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가로막는 폭력, 특히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존재하는 상황을 평화부재(peacelessness)라 규정한다(박주식 1996, 1).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평화를 “국내와 국제수준의 전쟁, 폭력과 교전 상태가 없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정의를 향유하는 것”(황영주의 옮김

2001, 81)으로 정의했다. 1989년 국제평화연구협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의 ‘여성, 군사주의 및 군축’ 연구 그룹은 이러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수용, 안보라는 개념을 “환경론적인 군사주의적 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생태학적 뼈대를 가진 평등, 지속가능성 및 정의에 대한 관심을 포함시키는 것”(Pettman 1996, 114)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물론 구조적 폭력의 제거와 적극적 평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며, 변화를 위한 전략”(Steans 1998, 120)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여성의 개인적 시민적 안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내의 안전보장 체계를 비군사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강력하게 헌신하는 것이다”(Cornwell and Wells 1999, 413). 여성과 평화라는 문제를 기존의 (소극적) 평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으로 환치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존의 젠더구성 방법에서 여성과 평화로 등치되는 본질주의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고, 이는 여성의 기존 권력관계에 대한 변화의지로 표현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적극적인 부분에서 여성에 의한 적극적 평화의 모색은 남성위주의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과 전복을 포함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힘 갖추기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 평화는 어떤 방법으로 모색이 되는가?

### 지구는 내가 “지킨다”는 의미의 수정 포괄적 안보에 대한 논의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자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으로 안보의 주체와 대상은 민족국가(nation-state)라는 점이다.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은 국가의 존망이 안보의 관건이 된다. 다른 행위자, 예컨대 개인은 결국 국가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서 개인의 안보는 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민족국가의 존망은 현실적인 힘, 달리 표현하여 군사력에 의해서 확보되고 지탱된다. 따라서 군사력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일부 비판이론(the critical theory)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전략(military/strategic security) 안보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종류의 안보가 유일한 것이 아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여러 안보 개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달리 표현하여, 이들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의 안보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비군사적인 접근방법과 해결방법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잔(Buzan)과 같은 국제정치학자는 군사 안보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군사안보가 다른 안보 즉,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위협과 압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Buzan 1983, Constantinou 1995, 154에서 재인용). 토마스(Thomas)라는 학자는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경제 및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안보를 살피고 있다. 제 3세계 국가의 경제력을 지탱하는 농업 및 무역의 신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음식, 식수 및 건강에 대한 확보가 국민의 생존보장(안보)과 관련된다는 입장이다(Thomas 1987, Constantinou 1995, 154에서 재인용). 콘스탄티노우(Constantinou)는 전통적인 군사안전의 보장체로 여겨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하여 다루면서 NATO가 새롭게 떠맡아야 할 안전보장이 군사 안보에서 나아가 동구권 국가의 문화/종족 안보, 환경안보 그리고 여성안보(gender security)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stantinou 1995, 154-157).

때에 따라서는 또는 현실에서는 군사 안보가 오히려 다른 종류의 안보를 해치거나 심지어 불안정(insecurity)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에너지를 아끼기보다는 전쟁에서 효과성을, 자연을 보호하기보다는 (훈련과 실전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군대는, 군사안보가 환경안보와 양립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군사 안보와 다른 종류의 안보가 양립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예는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군의 존재에서 보다 명백하게 찾아볼 수 있다. 콘웰과 웰스(Cornwell and Wells)는 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은 다방면에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ornwell and Wells 1999).<sup>5)</sup> 한국에서 매항리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여러 사례를 비추어 보면 군사/전략 안보는 오히려 다른 일상적이며 포괄적 안보에 해를 끼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비군사적 또는 포괄적 안보에 “여성적 관심”을 가지고 보다 진전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티커너(Tickner)는 일부 국제관계학자들이 “...군사적 범위 못지 않게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관한 세계적이며 다차원적인 안보를 고려하는 공유된 안보(common secu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41). 이러한 공유된 안보는 앞에서 지적된 소극적 평화개념을 대체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수용하는 장이 될 것이다.

어떤 평화 연구가는 물리적, 구조적 및 생태학적 폭력 제거라는 용어를 안보를 정의하고 있다. 폭력을 고려함에 있어 물리적 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쟁과 평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가 아닌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평화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41, 강조체는 필자에 의함).

티커너는 여기에서 공유된 안보 개념과 페미니즘이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그에게서 다차원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안보를 고려하는 것은 군사적인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안보는 남성적인 국제정치이론의 주제와 쟁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

5) 첫째, 주둔군지위협정(SOFAs)같은 관행은 미국과 미군이 주둔하는 해당 국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주둔국에서의 정체성 갈등, 인종주의 등 문화/종족 안보(culture/ethnic security)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한다(Cornwell and Wells 1999, 410). 아마도 한국에서 목격되었던 SOFAs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둘째, 미군은 존재를 곧 배출 및 강간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의 발생과 관련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성 안보(gender security)를 훼손시키게 된다(Cornwell and Wells 1999, 410-411).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2년 한국에서의 미군 병사에 의한 윤남이양 살해사건 및 1995년 오키나와에서의 미군병사에 의한 12살 소녀에 대한 강간일 것이다. 미군 기지 인근의 각종 상관된 산업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를 담보하는 미군 기지는 해당 지역 주민의 깨끗한 물과 공기, 향유해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필리핀의 있었던 이전의 미군 기지는 다른 어떤 곳보다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판명되었고, 탄약 공군기지에서 방출되는 먼지와 오염수로 인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rnwell and Wells 1999, 411-412).

었지만, 여성적인 가치와 쟁점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된 안보 또는 새로운/포괄적 안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여 전통적인 국제관계학에서 무시된 주제와 쟁점을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된 여러 가치들은 우리 문화에서 여성성과 관련된 여러 정의된 특질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 티커너의 지적이다.<sup>6)</sup>

### 지구를 “지키는” 여성들 : 페미니즘에서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일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앞에서 지적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포괄적 안보 또는 전(全)지구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은 단순한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에서 수동적인 평화를 지켜내는 힘없는 사람이기보다는 포괄적 ‘안보’를 지켜내는 능동적이면서 힘을 갖춘 ‘여성전사’로 변환된다.

모성애적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여성 또는 여성 전사(women warrior)라는 분명한 구별은 점차로 힘들어지고 있다; 사실상, 많은 여성들은 전사가 되는데 그것은 여성이 어머니이자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Pettman 1996, 114).

티커너의 『여성과 국제정치(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책의 부제는 “페미니즘관점에서의 전(全)지구적 안보성취(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이다.<sup>7)</sup> 특히, 그는 포괄적 안보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 및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와 관련시켜 국가(군사)·경제·생태의 대안적 안보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달리 표현하면, “...평화달성, 경제정의, 생태학적 지탱은 지배 종속의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소멸과 불평등한 젠더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관계의 제거를 함께 필요로 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166, 강조체는 필자에 의함). 스티인(Steans)의 경우도 안보에 페미니즘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군사적 시각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또는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Steans 1998, 105). 그렇다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념화될까?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군사적 안보와 어떻게 관련될까?

6) 하지만 티커너는 공유된 안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젠더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포괄적 안보는 (남성과 여성의) 지배와 복종관계가 제거될 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42).

7) 물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 무시되었던 여성 혹은 젠더를 그 과목의 분석도구(an analytical tool)로 사용하여 국제정치학의 이슈와 아젠다를 바꿀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Tickner 1999, 46을 참조하라.



## 국가(군사)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

종래의 현실주의적 군사적 안보에 대한 접근방법은 주로 국가가 갖는 내재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필요하다는 가설에 주로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주로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전제로 한다. 첫째, 티커너는 오히려 다차원적인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여성 또는 나아가서 인간이 갖는 협력에 대한 보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성과 관련된 특질임을 강조한다. "인류에게 상호의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동체 건설이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국제행위의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황영주의 옮김 2001, 171) (협력의 가능성, 공동체의 건설)

둘째,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은 주로 국내적 질서/국외적 무질서라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모델, 즉 (국가의) 외부와 내부, 무질서와 질서, 해외와 국내사이의 엄격한 경계구별이라는 가설에 기초한다. 이때 국외는 폭력이 만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인 반면, 국내는 완벽한 질서와 안전이 보장되는 쪽으로 인식된다. 티커너는 갈등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경계구별은 부적당하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국내적 질서/국외적 무질서라는 이분법은 최소한 여성에게는 타당한 것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생활 자체는 국내적 질서라는 공간 안에서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공공영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적영역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 폭력은 국가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며, 철사 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일에 말려들기 싫어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83). 이에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함께 모든 분석의 수준(all levels of analysis)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억압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지적한다. 안보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은 폭력과 억압이 국제적, 국내적 또는 가정의 영역이라는 상관없이,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85). (여성에 대한 폭력의 환기, 각 수준에서의 폭력의 관련성 폭로)

셋째, 여성들의 시민적 가치는 주로 (군사주의에서)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라는 이분법에서 보호받는 자로만 인정받아 왔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영속화와 관련된다. 티커너는 국가를 위해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영광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전통적 시민권 개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용기에 맞추어진 보다 건설적인 시민권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황영주의 옮김 2001, 90). 직접적인 국가의 갈등에 직면하여 여성이 갖는 시민권과 애국심은 남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을 통한 시민-방어자(citizen-defender)의 개념, 공격성과 전쟁에 기초하는 전통적인 애국심이 아닌, 타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조국에 지지를 보내는 절제있는 애국심(moderate patriot), 정치적 중립심이나 정체성의 문제를 희생에서 책임으로 이동하는 정치 등이 티커너가 제안하는 젠더화된 시민권에 대항하는 여성적 시민권의 내용이다(황영주의 옮김 2001, 90). (비 군사화된 시민권 개념).

## 경제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

한편으로 티커너는 기존의 경제학이 갖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작한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개인과 국가의 합리성이란 따로 자기 이해를 극대화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124).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이란 주로 공식생활의 경험과 관련되는 남성적 특질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관련시켜 합리성을 '보살핌과 책임감의 윤리'까지 포함해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티커너는 기존의 경제학이 주로 체제에 관심을 두는 가정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대안적인 경제안보는 체제보다는 개인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페미니즘적 관점은 분석의 기초단위로서 개인을 취하지만, 그 개인은 (기존의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합리적 경제인과는 구별되어 규정된다"(황영주의 옮김 2001, 125). 페미니즘에서 상정하는 개인은 기존의 경제활동으로 여기지는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활동(육아, 보살핌)을 포함하는 상호의존적인 개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포함하기 위하여 생산이라는 공식영역에서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의 세계와 시장 경제 바깥에서 어머니로서, 보살핌 제공자로서, 일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들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는 무너져야만 한다.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 생산이라는 "합리성" 혹은 "효율성"의 세계와 재생산이라는 사적인 세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여된 가치의 간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또한 재생산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면,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품 생산의 효율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황영주의 옮김 2001, 125-6, 강조체는 필자에 의함).

실제로 여성들은 대부분 국제체제의 주변과 경제적 하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은 여성에 대한 정의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에 우선 순위를 둔다. 달리 표현하여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의의 성취, 안보의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여성 노동가치를 폄하시키는 인위적인 성별 분업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생산과 재생산과 연관된 지불과 미지불 노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분담될 때,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여성이 직접 관여하는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경제적 전략, 무엇보다도 상품과 부을 위한 생산보다는 생명의 생산에 연관된 모델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구축하는 것에서 경제에 대한 대안적 안보는 확보될 것으로 티커너는 주장한다(황영주의 옮김 2001, 126-129).

## 생태적 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

티커너의 경우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권력과 별개의 문제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연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타 인류에 대한 백인 남성의 지배와 분명히 관련시키고 있다"(황영주의 옮김 2001, 160). 환경 위기는 인간들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 때문에 자연(자원)에 대한 전유(專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국가 간의 권력 불균형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버릴 때 현실화된다. "생태학은



위계질서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의 지배와 싸워나갈 수 있는 "위계에 있다"(황영주의 옮김, 2001, 161). 그리고 이러한 위계질서의 소멸은 계급주의를 포함해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의 극복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남성/여성, 문명/자연이라는 입장은 여성을 남성중심적 문화와 우위라는 시각에서 여성을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오히려 이러한 문명/자연라는 이분법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에코페미니즘은

근대국가의 탄생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근대과학이 갖는 착취적 태도의 역사적 기초와, 공적 생활에서 여성성을 부정적한 것으로 만드는 젠더 역할의 분리 간에 분명한 상호관련성을 드러내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7세기 초기 유럽에서 젠더 역할의 이분화(the dichotomization of gender)는 자연에 대한 근대적(착취적) 태도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국제정치와 경제학의 이론 구성에 중요한 토대로 이바지하였다(황영주의 옮김 2001, 173).

따라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여성들은 환경파괴의 희생자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결정 수준, 즉 국가와 국제수준에서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행위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환경운동의 참여는 일상적인 가족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생산하는 자로서의 경험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남성의 참여와 동일한 방법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은 현재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적 태도 또는 근대성의 기계론적 관점에서 탈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이 비단 인간과 자연간의 위계적 관계뿐만 아니라, 젠더관계를 포함하는 지배와 종속의 문제로 환원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황영주의 옮김 2001, 162-164).

티커너의 논의가 주로 기존의 국제정치의 중요한 쟁점, 예컨대 군사, 경제 및 환경의 중심 개념의 대안제시를 통해서 포괄적 안보논의를 진행시킨 반면, 스티인의 경우는 이 안보 논의를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한편으로 인권접근방법(human rights approach)은 포괄적이며 전(全)지구적 안보라는 개념이 인권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가정을 갖는다. 이때 인권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 이윤배분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Steans 1998, 124-6). 다른 한편으로 인간중심접근방법(people-centred approach)은 국가중심적 또는 군사중심적인 안보개념을 배격하거나, 주목하는 방법에서 '인간'안보를 추구하는 문제에 관련된다. 인종, 계급, 성별 및 정치적 입장에서 야기된 다양하면서 중첩된 불안정은 다양한 구조적 폭력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Steans 1998, 126-128). 요컨대, 스티인의 주장은 포괄적·전지구적 안보는 주로 공동의 인간(the common humanity)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 여성과 포괄적 안보 : 글의 끝

나는 한 신문광고의 해체를 통해서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평화와 안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구는 내가 지킨다"는 의미로 길으로 보기에 군사적 일상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만 이해되지만, 이를 해체시켜 본다면 "지구는 내가 지킨다"는 페미니즘의 적극적 평화 또는 포괄적 안보의 대안적인 혹은 진보적인 전략으로의 역전과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은 비무장의 존재이기에, 평화와 관련된 존재이기에 여성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흔히 많은 페미니즘 학자들의 비판에서 지적되듯이 기존의 남녀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동적인 여성성(passive femininity)을 젠더의 이분화과정 속에서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적극적 평화 혹은 포괄적 안보 개념은 여성(성)을 본질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극복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틀이 된다. 무엇보다도 반군사주의 입장(the anti-militaristic stance)을 포함하는 군사안보에 대한 대안적 논의는 전쟁/평화라는 이분법을 극복해주는 긍정적인 믿음을 포함하면서, 오히려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군사적으로 '문제' 있는 세계로부터 지구 자체(포괄적 안보)를 지키는데 제안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실제적 측면(the practical aspect)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은 아울러 이론적 측면(the theoretical aspect)에서의 가능성과 함께 한다.

현재의 국제정치(학)의 주요 개념이 국가, 인종, 계급 및 성별간의 지배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지식과 개념 형성 자체가 바로 힘이 있는 자들(강대국 또는 남성)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고 자연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은 이를 극복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여, 기존학문의 페미니즘적 재정의(reformulation)의 장이 새로운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적 관점을 기존의 안보 논의에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 관점으로 기존의 안보 논의를 재구성(reconstruct)하는 것이나 (Steans 1998, 129).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에 관한 것도, 동시에 남성적 주류에 여성을 부가시키는 것도 아닌, 오히려 존재(being)와 아는 지식(knowing)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지적하는 피터슨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Peterson 1992, 205).

여성이 주로 근대성의 정치원리에서 타자와 국외자로서 내우만왔고, 현재의 국제정치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주로 타자에 대한 배외(排外) 또는 국외자에 대한 거리두기와 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면, 여성은 이러한 타자의 윤리와 국외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는 내가 지킨다는 광고가 파괴적인 군사주의 구호에서 건설적인 포괄적인 안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여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복적인 (또는 역설적인) 아름다운 영혼(subversive beautiful soul)이 된다.

## 참 고 문 헌

-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예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9) (1993).  
 권인숙. "우리 삶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1) (2000).  
 김윤옥.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사회평론』 9월, 10월 (1992).  
 박주식. "탈현실주의 평화학"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6).  
 정현백. "한국 여성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1) (2000).  
 이재봉.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6).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심민지 유산 속에 숨쉬는 가족제도" 『여성과 사회』 (10) (1999).  
 양삼석. "한국군사정권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신문기사에 나타난 군 관련용어의 사용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 (1996).

오미영. "군사화에 의한 젠더 위계체제 강화" 신라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오미영·황영주. "군사주의 폭력과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과 평화』 (2) (2001) 세계여성.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8.

황영주의 옮김. 『여성과 국제정치』 안 터커너,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2001.

조선일보 2001년 5월 12일자

Benhabib, Seyla. "On Hegel, Women and Irony" In Mary Lyndon Shanley and Carole Pateman (eds), *Feminist Interpretation and Political Theory*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Bleiker, Roland. "Korea: The Politics of Insecurity" Presented Article at ISA Annual Conference (2000).

Burguières, Mary K..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19(1), (1990).

Constantinou, M. Costas "NATO's Cap: European Security and the Future of the North Atlantic Alliance" *Alternatives* 20 (1995).

Cool, Diana. *Women in Political Theory: From Ancient Misogyny to Contemporary Feminism*. Hertfordshire: Harvester, 2nd edition, 1993.

Cornwell, Rachel and Andrew Wells. "Deploying Insecurity" *Peace Review* 11(3) (1999).

Molloy, Patricia. "Subversive Strategies or Subverting Strategy?: Toward a Feminist Pedagogy for Peace" *Alternatives* 20(1995).

Peterson, V. Spike.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21(2) (1992).

Pettman, Jan Jindy. *Worlding Women* London: Routledge, 1996.

Steans, Jill.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Polity Press, 1998.

Sylvester, Christine.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Order of Peace."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네스코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Sylvester, Christine. "Riding the Hyphens of Feminism, Peace, and Place in Four (or More) Part Cacophony" *Alternatives* 18 (1993).

Tickner, J. Ann. "Sera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1) (1999).



##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박노자

### 머리말

한국 사회에서 군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1991년 여름이었다. 성페테르부르크 국립대 한국사학과 학생이었던 나는 그때 들뜬 기분으로 한국 어학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참이었다. 선배들이 다 하나같이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갔다오곤 하였는데, 나에게 한국 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미지의 땅 남한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자랑이자 부담이었다.

남한 실태에 대한 책이라곤 안 읽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였는데, 그 당시에 소련의 남한 관계 자료가 북한의 어조를 많이 답습한 관계로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곤란하였다. “그게 아니다”는 생각으로 책을 접어 두고 남한을 이미 잠깐이라도 가 본 일이 있는 학계의 원로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질문 공세를 폈다. 대부분은 서울의 화려함과 물자의 풍족함을 높이 평가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관찰을 이야기해 주는 데에 그쳤는데, 한국 고대 문학을 전공하는 한 여교수의 대답은 그 당시 나로서는 상상 밖이었다:

“그 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이란 환상적인 것이요. 그 산, 그 계곡 들을 한참 보다가 혼이 빼앗긴 것같이 때로 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손님, 특히 고위급 손님한테 보이는 친절은 상상을 훨씬 넘지요. 그러나 열심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그 나라의 정치 구조는 우리 소련과 대동소이한 무서운 독재이고, 그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역시 군대가 아닌가 싶소. 그 사람들이 군대에 안 갔다온 남자를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우리 소련의 하층민들과 똑같아요. 거기에서 군대 복무는 주요한 통과 의례이자 정권을 위한 세뇌 기간이에요. 하여튼 첫날부터 모든 주요 건물을 자동총을 든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 광경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평화주의를 거기 가서 들먹이지 말았으면 해요. 그 사회와는 아직 안 맞으니까, 거기가 서구라파가 아닌 사실을 알고나 가시게!”

소련 말기에 공산당의 부패한 일당 통치를 혐오하는 지식인들에게 '소련 독재'라는 말은 최악의 정치 형태를 뜻하였다. 소련군에 의한 무자비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막 끝난 직후에, 나와 같은 젊은 학생들에게 군대에 가서 살상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학생답지 못한' 일로 인식되었고, 서구 신좌파식 평화주의가 매우 매력적이었다. 독립하려던 '야제르바이잔이나 발틱 공화국에서 소련 군대가 횡포를 부리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때에, 군대에 갔다온 것을 환영한다는 것은 “의식 없는 소시민 수준의 것”이라고 의식되었다. 한 마디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그 독재를 받쳐 주는 살인자 집단인 군대, 그 군대를 우러러보는 '의식화되지 못한' 소시민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웠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우리와 같은 독재와 군대 위주의 사회, 우리와 같이 군대를 좋아하는 우민(愚民)들이 존재한다니 웬 날벼락? 사회주의 진영의 선전을 의심하였던 우리는, 우리가 읽어야 했던 북한 책들과 북한 논조를 따르는 소련 책에서 남한 관련 서술이 매우 부정적인 만큼, 오히려 우리와 그때 거의 교류가 없던 남한을 무척 궁금해 하고 좋게 보려고 했다. 금단의 열매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까? 북한이 우리와 같은 일당 독재 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북한과 대치하는 남한을 어렵듯이 서구식 민주 국가로 상상하였는데, 남한을 '군국주의 국가'로 보는 그 원로 여교수의 말씀이 여간 충격적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갖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구시대의 인물이 남한을 잘못 보신 거였겠지”라는 단순한 해답으로 결국 평안을 되찾았다. 그때의 나의 순박함은 지금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 '죽을 고생'이라는 화두

1991년 이른 가을, 설레는 마음으로 김포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 다습하고 몹시도 따뜻한,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날씨에 나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매우 반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인가? 여권 검사를 받고 난 나에게 제복을 입은 중년의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한국에서 어디에 얼마 동안 있겠느냐, 뭘 할 거냐 별의 별 것을 다짜고짜로 따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공부할 고려대학교의 대표자가 마중 나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순진하고 어린 나는, '민주 국가' 남한에서 소련이 '특정 국가'(즉 적성 국가)로 분류되어, 장기 체류할 소련 시민이라면 다 공항에서 안기부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고려대학교 기숙사에 투숙, 같이 생활하고 공부할 한국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감동적인 시간들. 그러나 만남의 첫순간부터 나는 어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극동 문화권에서 우리와 달리 사회의 일체 관계가 연령 질서로 이루어져 통성명한 뒤 꼭 상대의 나이를 묻는 것이 그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을 '조선 문화' 시간에 배운 바 있는 나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몇 살이냐?”는 첫 번째 질문에 전혀 난색을 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 내가 낯선 '조선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인지, 나에게 “군대에 갔다왔느냐”는 걸 왜 물어 봤을까? 모든 학생이 재학시에 병역이 면제되고, 준박사까지 획득한 학자는 종신토록 병역이 면제되는 소련의 지식인 사회에서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하였다. 짧은 한국어로 이 상황을 요령껏 설명하자 고려대 학생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한국에서 징병제가 존재하는 사실을 책에서 알고, 소련과 같이 모종의 지식인 우대 정책이 있는 줄로 생각했던 나는, 놀란 어투로 “그럼, 당신들도 군대에 갔다와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고려대 학생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그 중에서 한 선배가 웃으면서 “거기에 가서 죽을 고생 실컷 하고 어른이 되어 돌아간다”는 식의 대답을 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대단한 궁금증을 느꼈다. '죽을 고생'이라니 무슨 말일까? 주로 저학력자들만 가는 소련 군대에서는, 고참에 의한 신참 구타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노골적인 테러적 권위주의가 팽배하였다. 소련 군대에서의 인간성 파괴는 우리 같은 젊은 학생들의 반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소였다. 그러나 우리와 오랫동안 대치해 왔던 '서방식 국가' 남한에서도 소련과 같은 폐단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군대에서 어른이 된다”는 발언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의식화되지 않은 소시민'들처럼 폭력 집단인 군대에서의 복무를 모종의 통과 의례로 보고 있다는 원로 여교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가?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



하여 학생들에게 설명을 부탁하였다.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죽을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인지? 흥분한 나를 보고 있는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와서 드러내 놓고 파안대소하기 시작하였고, 나에게 별다른 대답을 주지 않았다. 지금 생각으로는, 군대에서 이미 머리가 깨지도록 맞았거나 화장실에서 기합받고 고생할 각오를 하던 그들이, 나를 끝없이 순진한 외국인으로 보고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처음으로 보는 외국인에게 전차의 포신에 발목이 묶인 채 걸려서 구타를 당하는 이야기, 총을 잘못 담은 죄로 이빨 몇 개를 잃은 이야기, 의무실에서 깨진 머리를 깨매는 이야기, 이 모든 '죽을 고생'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 주면 자기 얼굴에 먹칠한다고 생각했을까?

하여튼 그때 그 첫순간부터 나는 그 고생이 무엇을 뜻하는지 꼭 알아내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겪은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내심 다짐하였다. 이 두 개의 화두를 가지고 나는 지금껏 한국 사회를 나름대로 탐구해 왔지 싶다.

고려대에서 공부하는 3개월 동안 나는 한국 남학생 몇과 꽤 가까워졌다. 초면부터 '죽을 고생'과 '통과 의례' 이야기를 시키는 것이 무례인 줄 알아챈 나는, 이제 몇 번의 만남 뒤에 술자리에서 군대라는 화제를 조심스레 꺼내는 수법을 택하였다. 생각보다 반응이 호의적이었다. 형식적인 대답으로 대충 얼버무린 사람도 있었지만, 군대 생활에 대한 회상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학생도 있었다.

내가 그 학생들의 고백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이랬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어릴 때부터 군대에 대해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맛을 고생과 음식 급히 먹어야 할 일, 상사의 뉘달을 잡자고 참아야 할 일 등을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하여 군대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과 거부감을 갖는다. 아무래도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신병 안전을 지향하는 것은 고급동서를 막론하는 인류의 상정인 셈이다.

특히 '운동권'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군대 가서 동족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특별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군대 복무가 남성에게 가장 중대한 통과 의례로 인식되었고, 군대를 갔다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즉 병역 미필자는 이른바 '조직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도 어렵고 진출하기도 힘들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결국 가정과 사회가 남성들에게 취직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은 구타에 대한 공포감과 자유 박탈에 대한 거부감, 동족 살상 가능성 앞에서의 좌절감 등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희생시켜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사회적인 굴복과 반발을 자제하는 대가로, 억눌린 분노가 많은 남성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소련보다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남한에서, 많은 남성들이 그 풍요를, 남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2~3년 동안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아내야 하고, 나중에 알게 모르게 어떤 형식으로든 그 후유증을 애써 치유해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이 학생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군대

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인 의식을 거의 갖지 못하고, 매체의 '통설'들을 거의 암기하듯이 반복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상당히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분단 상황이라서 군대에 안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동구권 몰락 이후에도 북쪽이 정말 남한에 대한 적화 야욕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아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과장이다", "외세 개입의 합리화다"라고 답할 정도로 비판적인 정치 의식을 보였다.

이러한 대답을 들을 경우,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치 상대가 공격해 올 역사가 없어도 징병제 군대가 꼭 필요한지 물어 보곤 하였다. 대중 매체에서 잘 안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되자, 그들은 보통 난색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대답은, "모병제로 하면, 아무도 군대에 안 갈 것이다"였다. 이 대답은 실제로 응답자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어느 정도로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게 여기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병역 의무가 정말 신성시되었으면 군대에 제 발로 갈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나는 그때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 대신에 나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어, 모병제 군대의 사병의 사기나 기술 수준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는 것, 그리고 모병제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족을 거느리며 살고 또 그들 자신도 전문가 의식을 가진 관계로 구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2~3년을 낭비하고 평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더 내서라도 모병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냐?"고 마지막으로 물어 보곤 하였다.

대개 "우리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도 못하였다"는 식의 대답을 하였지만, "매스컴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나도 생각을 못하였다"는 솔직한 고백을 접할 때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운동권에 속하는 극소수 학생들이 "피치자들에게 군 생활을 통해서 북중의 논리를 주입시키려는 남한의 지배층이 통일 이후에도 징병제를 고집할 것이다"는 식으로 자신의 비판 의식과 고민이 담긴 대답을 하곤 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유럽 사회나 소련 지식인 그룹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이 나라에서는 '운동권'이라는 일종의 반란자 대열에 속해야만 한다는 점이였다. 군대라는 것이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훈육 기관이라는, 우리로서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반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꼭 반란을 일으켜야 할 현실! 역시 원로 여교수의 얘기가 맞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느꼈다.

고려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나는 한국 학생들의 군대 의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에게도 분위기가 허용되는대로 "남자들이 제대 후에 심리적인 변화가 보이는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였다. "성숙해진다"는 류의 상투적인 대답도 있었지만, 어떤 여성은 제대 이후 남성들이 인격에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무부의 거의 의무적이다 싶은 집단적인 음담패설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냉소주의, 소비주의적 경향이 강해진다는 관측이 있었다.

여자 친구를 독실히 존중해 주고 애인과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봤던 순수한 남성들도 제대 후에 남녀 관계를 단순한 '교미'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여학생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았다. 고참들에게



거의 의무적으로 자신의 성 경험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애인에 대한 일종의 '의무적인 배신'으로 보는 여학생도 있었다. 이성 관계에 대한 순수한 개념들이 복무 기간에 다 깨진다는 지적 이외에는, 군대에서 배운 신참에 대한 폭행의 악습관이 결국 제대 이후에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흥미로운 지적도 있었다.

군대에서 약자이자 하급자에 대한 폭력을 철저히 배운 사람들로서는, 약자요 일종의 이류 시민인 아내나 아이들을 존중해 주거나 평등하게 대해 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폭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자기 남자 친구한테서 발견했다는 어떤 여성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징병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크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때 소련 말기의 군사적 권위주의에 염증이 난 나를 포함해 많은 소련 학생들은 철저한 평화주의를 신조로 삼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입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이를 결사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사회적·신체적인 피해를 자신이 당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였다. 사회가 아직까지 전쟁이라는 공공연한 살인을 당연시한다면, 차라리 가해자가 아닌 철저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신념은 그 당시 소련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재학생에 대한 병역 면제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정권과 크게 충돌하였을지도 모른다.

이 평화주의라는 것은, 남에 대한 침략과 자기 나라 백성에 대한 학살로 얼룩진 소련의 지극히 폭력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 나름의 반성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한민족도 20세기에 벌어진 일련의 폭력과 국토를 거의 황폐화시키다 한 6·25 전쟁,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와 역대 군사 정권의 횡포 등 각종 군사적 폭력에 몹시 시달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 학생 중에서도 나와 같은 평화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일종의 '동지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학생들은 대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평화 지향성을 보였지만, 서구 반전 운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확고한 입대 거부 의지를 가진 이는 별로 없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산다"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그릇된 상식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깊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나라'라는 상대적·현실적 구조에 '비폭력'이라는 절대적·도덕적 진리를 대립시켜 나라와 관련된 일체의 현실적 이해 관계를 포기할 자세를 갖추어야 비로소 '나'라는 형이상적인 존재가 성립한다는 나의 주장은 별 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물론, 원칙적으로 폭력이 비도덕적이고 비폭력이 우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이 철학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국가'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국가'라는 존재가 위협적이고 전지전능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국가의 대립'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못 믿겠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거나 하나의 환상적인 화제로 치부해 이야기를 돌리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는 비로소 한국적인 상황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형이상적인 원칙에 의한 저항'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다.

모든 저항을 무조건 물리력으로 분쇄하려는 파시스트적 국가와 그에 대한 맹종에 길들여진 냉소적인 사회에 절대적·도덕적인 원칙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인간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이해하였다.

3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한국 군대의 진정한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라는 화두를 계속 놓지 않았다. 한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러시아로 유학 온 한국 학생을 만날 때 나는 부단히 상대방의 군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내가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피해담들이 상당히 많았다.

고참에게 귀를 얻어맞아 청력을 거의 잃었다는 고백, 구타에 따른 신경쇠약증으로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는 호소, 구타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한 자살 미수의 경험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은, 파시스트적 국가를 지탱해 주는 국민 각자의 희생과 부담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들은 경험담 중에서 기억에 가장 생생한 것은, 한국 출장 때 한 택시 운전 기사가 월남 전쟁 때의 상습적 만행을 거의 추억스럽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다.

고엽제로 지금도 고생한다는 그 운전 기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부대가 야만적인 수법(거꾸로 매달기와 불 고문, 총살)을 '선진적인' 미군들에게 배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게릴라의 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자랑이었다. 동족 민간인의 피해를 의식한 게릴라들이 한국 군인들의 '과단성(?)'을 확인한 뒤에 한국군에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설명이었다.

군대에서 민간인에게 저지른 만행들이 일종의 전략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민족'과 '신성한 국방'을 들먹이는 군대가 사실상 폭력 단체에 불과하다는 나의 평소 신념을 뒷받침해 주었다.

나와 군대 이야기를 나눈 한 젊은 회사원은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실컷 맞다가 나중에 속 시원하게 실컷 때리고, 그러면서 조직 사회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였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줄도 알고 시킬 줄도 안다."

함축성이 많은 이 간단한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한다면, 본인은 군대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권위주의를 잘 체득하였다는 것이고, 심적인 폭력(맹종의 강요)과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도덕적 평가라도 내릴 만한 인간성마저 파괴된 셈이다. 우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맹종 학습의 의무'로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대가 양심 따위의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완전 해방된' '조직 사회형' 인간들을 양산함으로써 파시스트적인 국가의 최대 교육 기관 역할을 했음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1997년 초에 경희대 전임 강사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어 현재까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온 나는, 지난 3년 동안 학생들과 군대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미 '죽을 고생'의 의미와 구타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군대의 독특한 '교육법'을 대충 파악한 나는, 경희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군대에서의 구타를 일소하겠다는 정권의 홍보와 달리, 구타 사건의 빈도가 줄어들고 구타의 강도가 다소 낮아졌을 뿐 물리적 폭력이라는 '교육 방법'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군대에서 정규적으로 얻어맞았다"는 대답을 하였고, 특전사나 해병대에서 복무한 응답자들은 매주 몇 차례씩 거의 관례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들 대부분의 의식 세계에서 구타와 군대가 이미 동의어가 된 것 같았고, 구타가 없는 군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구타 문제의 여론화와 부대 내 공중 전화의 설치, 부모와의 면회 횟수 증가 등으로 구타의 강도가 나



름대로 떨어졌다지만, 이를 서구 군대들에서 볼 수 있는 구타 엄금과 동일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구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군대에 대한 지배층의 실제적 요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듯하다. 지금도 나라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한국의 보수 정객들과 재벌들이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평상시에 '상전'을 위해서라면 비자금 조성이든 세금 탈루든 필요 없는 자동차 공장 계획 추진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충복' 이고, 유사시에 아무런 생각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동족을 쏘아 죽일 수 있는 '강인한 애국자'이다. 출세를 위한 맹종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는 '인간 로봇'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군대에 대한 권위주의적 인 사회의 주문 사항이다.

그리하여 인간 존엄성의 개념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반발심 등의 '불필요한 심적 현상'을 질병의 마음에서 일소시켜 버리는 것이 군대의 주요 의무가 되는데, 이러한 '교육적 과제'를 물리적인 폭력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대다수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유와 존엄성을 지향하지만, 이러한 자유 지향적인 본능들보다 신체적 통증에 대한 기피 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반사 작용을 질병에게 강요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구타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개혁하겠다는 보수 정권의 레변은 한갓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

절대 복종을 할 줄 아는 하수안들을 필요로 하는 거대 보수 조직들(군대, 재벌 등)이 존재하는 한, 구타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병역 의무에 대한 문제 의식이 반체제 운동이 활발하던 1990년대 초에 비해서 오히려 위축된 것처럼 나타났다. 개신교 계통의 몇몇 교파 같은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신앙적·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 거부라는, 서구에서 매우 흔한 개인의 권리 행사는 한국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중산층은, 군대라는 억압적 체제와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보통 병역을 대기 기피하는 지도층을 모방하여 부정확한 방법으로 자식들의 군 복무에 특권적인 여건을 획득하려고 한다.

아이를 적어도 전방 근무로부터 막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특권층 소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이 된 셈이다. '위로부터의 부담'을 되도록 줄이려는 '밑으로부터'의 추세는 억압적 체제의 부패성 증가를 잘 반영하지만 이 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체제의 틈새에서 편하게 '놀이'를 갈망하는 심리가 그 체제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이다. 제도화된 폭력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완강한 저항만이 억압 체제의 진정한 종말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 사람의 대학 교수로서 내가 느낀 것은, 군대 복무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학습 효과 또한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한 학생의 경우처럼, 특전사 복무 이후에 신경쇠약증, 악몽, 손떨림, 대인 관계 기피 등 구타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외국어 공부를 아예 중단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군대에 갔다온 대다수 남학생들은 교수들을 무의식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장교'들과

동일시하여 교수와의 접촉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최소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원어민 교수와의 부단한 접촉·대화·토론을 요구하는 외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상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공포 심리가 외국어 실력 향상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다. 군대에 갔다온 남학생들이 입대 이전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돌아온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왜 상대적으로 낮은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 여성의 외국어 실력이 남성보다 우월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무 군대가 초래하는 학습 효과 저하 현상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지배층이 그래도 징병제를 신성시하고 성역화시킨 것은, 그들이 노동력의 질보다 노동력의 충성심과 맹종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당사자인 한국인들에게 한국 군대에 대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보수 정치인들이 다스리고 재벌들이 소유하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군대란 '보스'들을 맹종할 '충견'들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종의 '양견장(養犬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징병제의 존재 명분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북한의 남침 위협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병의 사기나 전문 수준이 낮은 의무 군대보다는 기술 수준이 높은 모병제 군대가 위협 방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징병제를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모병제는 물론이거니와 서구의 모든 국가에서 보이는 신앙에 의한 병역 거부권 및 대체 근무까지도 절대로 허용치 않으려는 당국은, 북한의 위협보다 군대 복무의 '교육적 효과'를 더 의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무반에서 병장에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아침을 떤 경험이 있는 사나이이라면 재벌 주인이나 국가 관료에게 '말대꾸'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상식으로 보인다. 자유 박탈과, 양심이나 이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절대적인 복종을 당연시·이상시하게끔 하급자를 훈련시키는 군대에서는, 구타 등의 폭력은 어쩌면 필수적인지 모르겠다. 이 방면에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보수 정권과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구타의 엄금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구타와 상습적인 아부, 맹종의 강요로 질병의 인간성이 극도로 파괴해지는 것은 징병제의 가장 큰 폐단이다. 이와 함께 약자에 대한 폭력 사용의 일상화, 상사에 대한 공포 심리 발생 등, 가정 생활이나 학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무수한 부정적 효과들이 생긴다. 이 무수한 병폐들을 혁파하는 첫단계로, 독일 군대에 있는 반인륜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서구 각국에 있는 신앙·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권 또는 대체 근무권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대 내의 하급자에 대한 폭력을 일반 폭력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고서는 군대에서 가장 가시적인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으로서는 현재로서 모병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병제가 도입됨으로써 징병제와 관련된 각종의 부정 행위(병역 기피 등)도 일소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도 꽤 향상될 것이며, 군대 자체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억압적인 문화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맹종 문화가 직장 생활마저 지배하는 한,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상급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거침 없는 자기 권리 주장 등 자유 민주 사회의 직장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무반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멸시적 언동들이 자취를 감추어야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가정 폭력 등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 문화로부터의 해방'이 한국 시민 운동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글을 마치며

주지하다시피, 서구 지역에서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생겨 나폴레옹 전쟁 때 그 위력을 보인 의무 상비군은 근대 국가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징병제는 병력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국민적인 통합과 결속, 국가 의식 고무, 지방적 이질성 극복, 대량 생산 기업에서의 근무에 필요한 규율 습득 등 수많은 대사회적인 '훈육적' 효과들을 가져 왔다.

규율적이고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현대 서구의 국가 사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그 장단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지만, 일단 그러한 사회의 형성에 징병제가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평시에 징병제를 유지하지도 않고 군대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하지도 않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파시즘 시기의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공산당 독재 시기의 소련처럼 군대를 전체주의적 정권의 유지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파시즘과 스탈린식의 '병영 사회주의'의 범죠행들이 노정되고, 월남전쟁을 계기로 젊은이들을 신식민주의적 전쟁터로 보내 만행과 학살에 길들게 하는 징병제의 문제점들이 노출된 결과, 구미 지역과 동구 지역에서 군대의 폭력 자체를 반대하고, 특히 징병제의 강제성에 반발하는 평화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평화주의자의 원칙은 군대의 근본적 존재 의미와 양립할 수 없지만, 사회 차원에서 군대가 아직까지 필요악이라면, 적어도 타자를 공격하고 목숨을 빼앗는 기술의 습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 근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화주의자들은 군사적 기능 습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월등히 낫다고 보고 있다.

평화주의 운동과 군대 자체 내의 전문화 요구의 결과, 미국·영국·호주·프랑스 등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은 이미 모병제를 택하였다. 나머지 서구 국가들은 징병제를 유지한다 해도 거의 다 신앙·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권 또는 대체 근무 선택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복무 기간을 대체로 1년 이내로 하고, 구타나 정치적인 주입 행위 등을 절대로 불허하는 서구 국가들의 징병제와 현재 한국의 징병제를 동일시할 수 없다.

자유보다 규율과 복종을 훨씬 더 선호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무서운 카드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분야까지 비판과 토론에 개방시키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의 파시스트적인 정권이 지탱해 오는 데 크게 기여한 군대가 과거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한다면, 시민 사회가 전체주의적 국가를 완전히 개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무반에서 발로 차이고 주먹 세례를 당한다면, 이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개인 인간성의 황폐화, 전체 사회의 폭력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고 맞는' 의무 군대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 박노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강의전임강사. 본명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Vladimir Tikhonov)이며,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 및 아프리카 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세계 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

-이삼열(숭실대 철학과 교수)

발제 정리 ; 씨진

### 1. 평화의 윤리와 철학 사상

-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의 평화윤리 ; 절대적 평화주의와 상대적 평화주의가 모두 존재
- 근대 철학자들 ;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면 전쟁이 감소하고 평화가 증진된다고 봄 =>윤리주의적·개인주의적 평화관에 머뭇
- 19세기 이후 역사주의적 관점과 이론이 발전하면서 역사철학적인 문제로 발전 ; 헤겔, 맑스 등
- 한편 무정부주의 쪽에서 절대적 평화주의 제기 ; 힘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설사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갓윈(Godwin))=>이후 쏘로우, 톨스토이, 간디 등의 비폭력주의, 윤리적 평화주의로 이어짐

### 2. 대중적 평화운동과 전쟁의 평화적 해결

- 18세기 말~19세기 초 윤리적 평화주의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대중적인 평화운동을 일으킴 ; 평화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조직된 힘과 여론을 통해서만 반평화적인 현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 평화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운동이 정치화하고 국제화하면서 차츰 평화주의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자세는 감퇴되고 현실정치에 적응하며 타협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증가함 ; 국제연맹, 국제사법재판소의 좌절, 1차 세계대전 발발 등
- 2차 대전 이후 평화문제가 국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정 속에서 평화문제가 윤리적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정치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화보장의 정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고 깨뜨리는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 발생=>한편으로는 평화문제가 정치인들과 군사전략가들의 문제로 넘어감
- 평화운동 진영에서도 평화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과제가 생김 ; 평화운동의 전문화(갈통)

### 3. 비판적 평화연구와 적극적 평화

- 미국의 주도 하에 안보 전략적인 평화연구나 갈등 조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후에 이러한 연구가 평화의 보장책이 될 수 없고 위협체제를 유지하며 위기로 몰아가는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비판적 평화연구 흐름 발생(요한 갈통, 프리츠 빌만, 헤르만 쉬밋 등)
- 비판적 평화연구를 통해 '적극적 평화' 개념 제기 ; 평화란 단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아님. 그러한 조용한 상태나 표면적으로 평온한 상태;평정(pacification) 평화연구를 평정상태를 이루는 조건에 관한 연구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곧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
- 진정한 평화연구는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얻음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요인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함(갈통).=>갈통에게 평화란, 폭력이 없는 상태 혹은 사회정의의 상태
- 폭력(갈통) ; 물리적인 폭력-구조적인 폭력(소극적 평화-적극적 평화)



- 평화(갈등) ;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게하는 모든 구조적인 폭력들, 즉 정치적 폭력,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탄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

#### 4. 80년대 반핵평화운동의 철학

- 1980년대 들어 서구에서 반핵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남=>이후 서구의 평화운동은 단순한 핵무기 추가배치를 반대하는 반핵 시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학교와 교회, 노조, 정당, 여성단체 등 각계에서 핵전쟁, 동서갈등, 환경과 생존, 군수산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보논리 등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짐. 즉 반체제적, 체제변혁적인 성격을 띤 역사적 운동으로 발전(이삼열씨 견해)

- 평화운동은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도성장, 자본의 독점, 군수산업의 확대, 업적주의와 효율우선주의, 환경파괴, 사회 계층적 분열 및 대립 등 체제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과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폭넓은 운동으로 발전=>그렇다면 80년대 서구 평화운동은 이후 어떻게 됐고, 현재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재평가해볼 필요 있음

#### 5. 냉전 이후 갈등의 문명적 해결

- 냉전 이후 크고 작은 갈등들이 더욱더 터져나옴=>평화연구의 중심과제가 갈등연구(갈등의 보다 문명적 해결)로 옮겨지게 됨.

=> 냉전 이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러한 맥락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문명적(!) 해결'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지...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갈등의 역사적·사회적 원인은 제국주의적인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 갈등을 문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결국 제국주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 오히려 '적극적 평화' 개념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갈등의 문명적 해결'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수용해볼 만 하지 않을까? 물론 그에 있어서도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 세계 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

이심열 (승실대철학과 철학과교수)

### 1. 평화의 윤리의 철학 사상

평화 문제를 생각하고 논하는 해은 역사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문화의 혼적에서나, 고대의 언어, 예술 종교의 내용 속에 평화에 관한 내용이 나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의 옛 언어가운데 평화란 말이 없는 데는 없다. 회담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eirene), 구약성서에 나오는 평화 사상(shalom), 로마시대의 정치적 평화 (pax romana)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신화나 종교 정치가 평화의 문제를 심하게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양에 있어서도 유교나 불교 속에 화(和)의 사상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화나 종교, 예술 속에 나타나는 평화 사상은 아직 막연한 평화에의 회귀나 기도에 불과했고, 인간이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된다면 누릴 수 있는 평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환상적인 평화를 그리고 있을 뿐이다. 유클리피데스(Euripides)의 비극이나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희극에 나오는 평화의 묘사들도 평화를 꿈꾸고 바라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욕구를 잘 그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평화는 아니었다.

평화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추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철학이나 종교 문화 예술 속에서 생각되고, 회귀되면서 사상이나 윤리적 가치로서만 보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평화의 사상이나 윤리는 통치자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 현실적인 역사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설득이나, 도덕적 호소를 통해서 전쟁이나

폭력을 막아 보거나, 덜 잔인하게 하려는 윤리적 운동이었지, 평화를 사호구조나 국제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실천하려는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은 되지 못했다. 대중적 조직을 통한 사회적 평화운동은 19세기에 와서야 일어나게 되고, 평화연구나 평화정책은 20세기에 와서, 그것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야 겨우 나타나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적대관계의 연속이었고, 공격과 파괴의 기술과 무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역사였지 평화를 추구하거나 증진시켜온 역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기술과 전략 학문은 크게 발전하고, 전문가나 종사자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평화에 관한 이론이나 기술은 보잘 것 없이 미약하고, 전문가나 종사자도 극히 적다. 이것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나, 평화운동을 밑받침할 정치적 세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sup>1)</sup> 침략과 수탈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한 자기 방어나 자기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비를 팽창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하고 의무였다. 용맹과 힘은 항상 미덕으로 찬양되고, 장군과 무사들은 높은 칭송과 존경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평화의 신봉자들이나 평화주의자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로 무시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전쟁이나 폭력을 피양하고 평화를 적대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평화주의(pacifism)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적 사상 속에서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겠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희랍의 철학사상 속에서도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며 단지 정당한 전쟁이나,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며 폭력이나를 이성적으로 판별하는 정도의 전쟁윤리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스토아 학파의 내적인 평안이나 조화의 사상도 평화주의를 심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민족이나 종족의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평화주의적 사상과 윤리는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하겠다.

구약성서는 호머의 서사시 못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질투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선지자들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고, 평화의 주로 묘사하는 사상이 있다. 이원화에 의하면 예루살렘(Jerusalem)이란 말은 평화의 전망(Vision of Peace)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한다고 평화에 대한 높은

<sup>1)</sup> Georg Pichl, Zum Begriff des Friedens, in : Manfred Funke(hrsg.), Friedensforschung, Bonn, Had Godesberg, 1975, S. 21

<sup>2)</sup> Elizabeth Flower, Ethics of Peace, in :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Charles Scribner's Sons, 1978, Vol III, p. 110



이상과 강한 반전운리가 특히 아시아와 에레미야,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의 말 속에 나타난다.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산상수훈과 가르침 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이웃을 형제로 여기라는 평화의 윤리는 지난 2천년 동안의 평화사상과 윤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것으로 작용했으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비록 4세기 이후 로마의 극교화한 기독교는 국가와 타협을 해서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을 정당화했고,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을 종군 무사를 통해 축복해주는 일을 했지만, 기독교 사상과 윤리 가운데는 초대교회의 교부 클레멘이나 오리겐처럼 강한 평화주의(무저항, 비폭력)를 표한 윤리사상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16세기의 제침례파(anabaptist)나 17세기의 퀘이커(Quakers), 메노나이트(mennonites) 등의 소종파 운동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왔다. 현대의 평화윤리 사상가들이 할 수 있는 플스토이(Leo Tolstoy), 마르탱(Jacques Maritain), 간디의 사상 속에서도 예수그리스도의 평화윤리와 무저항 비폭력 인간애의 사상이 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기독교의 평화윤리는 이러한 절대적 평화주의(absolute pacifism)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의 국가인 로마 속에서 로마의 평화(pax romana)와 타협해야 했던 역사적 기독교는 전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절대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어거스틴(Augustinus)이나 아퀴나스(Aquinas)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정당한 전쟁(just war)과 정당치 못한 전쟁을 구별하는 상대적 평화윤리를 강조했다. 아퀴나스는 영토를 확장하는 것 같은 공격적인 전쟁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 했고,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의나 진보다, 그 전쟁이 만들어내는 불의가 더 크다면 그런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전쟁의 목적이 평화여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나 칼빈의 전쟁관도 대체로는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다.

근세 합리주의나 경험주의 철학사상들이 보는 평화관은 대체로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동이 발달하게 되면 전쟁이 감소되고 평화가 증진된다는 생각이었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bellum omnium contra omnes)론에서도 자연의 상태는 전쟁밖에 없으나 장기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성이 발달할 때 평화의 질서를 추구하는 시민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국가와 민족간의 자연상태도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들의 자연상태나 마찬가지다. 국가간에도 장기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성이 발달해 계약을 맺거나, 조약가적인 힘이 통제하지 않는 한, 국가간의 전쟁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다. 칸트의 평화론도 결국은 같은 시민 사회적 이성론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 사회적인 계약관계가 국가간에 생길 때 전쟁을 없애고 세계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

어떤 종류의 전쟁이나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평화주의적 윤리를 견지한 사상은 오히려 무정부주의(anarchism)쪽에서 발전되었다. 초기 무정부주의자인 글윈(William Godwin)은 힘과 무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태도는 실사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보았다. 혁명적 폭력에만 그 말 자체에서 모순이라고 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무정부사상이 19세기에 셸리(Shelley), 소로우(Thoreau) 등의 시인, 문학가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이러한 평화주의적 윤리사상이 롤스토인에 와서 한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는 예수의 산상수훈을 철저히 부종하면서 원수 사랑, 비폭력의 원칙을 따르고, 물리적 힘의 사용이나 폭력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배격했다. 플스토이의 평화주의적 윤리사상과 인도주의는 간디를 비롯한 20세기 평화운동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철저한 비폭력운동에 위대한 정신적 힘을 부여했다.

## 2. 대중적 평화운동과 전쟁의 평화적 해결

인류역사와 문화 속에서 평화 사상과 윤리의식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것이 곧바로 정치적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대체로 철학자나 사상가 개인의 생각이었거나,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의 사상이었을 뿐, 권력을 가진 정치가나 군인들은 전혀 다른 윤리의식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화주의를 집단적으로 실천하려던 사람들은 17세기의 퀘이커 등, 기독교의 소종파 그룹들이 얼마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 18세기말에 이르러까지, 평화문제는 사상가 개인의 윤리의식에 머물고 대중적인 실천운동의 내용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오면서 윤리적인 평화주의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대중적인 평화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평화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조직된 힘과 역을 통해서만 반평화적인 현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19세기 초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봉건체제의 붕괴와 민주화가 유럽에서 이때 이루어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최초로 생긴 평화주의자들의 조직은 1815년 뉴욕평화협회(Peace Society)였다. 그 후로 런던과 파리 등지에서도 평화협회가 조직되었고, 20세기 초에 이르러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평화운동 단체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William Randal Cremer의 지도로 조직된 영국의 노동자 평화협회(Workingmen's Peace Association, 1871), Frederic Passy가 지도한 프랑스 평화연맹(League of Peace 1867), 독일의 Alfred H Fried와 오지

다. 세계 시민적인 이성이 발달하고 보편화해서 국제적인 분쟁들을 조정할 만한 국가 연맹기구나 세계정부 같은 것을 탄생시켜야 평화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국가연맹(federation)같은 기구를 통해 평화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한편으로 사회구조적, 제도적 정책으로서의 평화실현방안을 강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세계 시민적인 이성과 도덕성의 확립에만 있다고 봄으로써, 칸트 역시 윤리적 호소와 의식계몽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려던 윤리적 평화운동가였다고 하겠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설에서 출발한 벤담(Jeremy Bentham)도 법적론자인 칸트와 마찬가지로 평화실현의 방법으로 국가들의 연맹과 국제법적인 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공동선이라 는 것이다. 결국 전쟁은 모든 국가들이 공리주의적 윤리의식과 이성을 갖게 될 때에나 없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계몽철학사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이 가진 평화이론의 한계는 전쟁 이나 분쟁의 문제를 단순히 인간성이 가진 이기심과 욕망의 차원에서만 보며, 윤리적 이성을 갖게 함으로써만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주의적 평화관은 19세기에 들어와, 역사주의적 관점과 이론이 발전하면서, 평화의 실현이 사회적 발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될 때에 역사철학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헤겔은 사회나 국가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전쟁은 오히려 문제로 발전한다. 헤겔은 사회나 국가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전쟁은 오히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며,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절대정신이 실현되는 이성적인 세계의 단계에서나 평화는 기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에서도 평화는 더욱 더 진화된 미래의 진보적 사회에서나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모두가 현재와 같은 사회적 진보와 역사적 발전을 위해 모두림치는 현실에서는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발전의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이점에서는 칼 맑스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은 생산수단의 독점과 사유화로 인한 계급의 지배와 수탈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계급사투를 유지하는 한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진보로 억압과 수탈이 없어지는 사회주의적 세계가 실현될 때에만 참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민족주의와 계급의 해방을 역사발전의 목표로 삼았던 19세기 사상가들에게 전쟁과 폭력은 오히려 정의와 해방을 실현해 가는 역사발전의 방법으로 생 각되었으며, 평화는 완전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의 종말에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역사발전을 위해서는 정의의 전쟁이나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본 역사철학에 대해서,

리의 Bertha von Suttner에 의해 조직된 평화협회(Deutsche Friedensgesellschaft, 1891) 등 은 19세기의 대중적 평화운동단체로 손꼽힐만한 것이었다. 마침내 1889년에는 파리에서 세계 평화대회(Peace Congress)가 모이게 되고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이 조직되며, 이러한 운동들이 여러 나라의 정부들을 움직이게 되어 1899년에는 유명한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의 하그에서 정부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1907에 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42개국의 대표들이 모임으로써, 평화운동은 크게 정치화하 고 국제화하게 된다.

평화운동은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운동에서부터,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 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이 정치화하고 국제화하면서 차츰 평화주의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자세는 감퇴되고 현실정치에 적응하며 타협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증 가하게 된다. 그러나 1차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2차 하그 평화회의 때까지는 전쟁 을 없애고 군비를 감축하며,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윤리적 정신이 강하게 지배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성이 강한 결의문이 나 협약을 맺어놓고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맞지 않아 결국은 휴지조각이 되고 마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1차 대전은 평화운동과 회의의 결의문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1차대전 전까지의 윤리적 평화운동이 평화실현을 위해 채용한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것이었다 할 수 있다.① 하나는 교육과 의식화를 통해 전쟁이 낳는 악과 파괴 와 낭비를 계몽하여 사람들이 무기나 폭력을 쓰지 않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전사를 위해서는 전쟁참가 반대, 무기의 감축, 또는 화해무기 등 사용 금지, 포로의 인도적 처리 등이 제안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치,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국제적 조약체결 등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많은 협약이 맺어지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설치되지만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 라 일으키는 분쟁과 전쟁을 막을 능력은 전혀 없었다. 힘이 밀받침되지 않고, 강제력이 나 구속력이 없는 국제조약이나 재판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제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도 판사를 어떻게 채용하느냐를 정부간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던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1차대전이 종료된 후 이제는 전쟁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국제연맹을 조직해

3) Warren F. Kuehl, International Peace, in :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a. a. o. S. 118







했다. 또한 많은 기술자와 학자 지식인들을 제국주의와 인신민주주의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정치공토를 비난했다. 참된 평화연구는 오히려 민족해방이나, 사회정의의 위대한 투쟁, 보수 반동적인 파쇼세력들에 대한 투쟁을 지원하여 억압자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억압적인 구조를 파헤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2)</sup> 평화연구는 오늘날의 평화연구가인 Midgaard-Naess에 의하면, [전쟁과 평화의 조건에 관한 연구]라고 했다.(1958년에 쓴 책에서)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략적인 평화연구는 평화는 전쟁의 조건에 관한 연구였을 뿐이라고 Herman schmid는 지적했다.<sup>13)</sup> 평화연구가 정말 평화를 위한 연구가 되려면 군사력과 전쟁을 통해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화의 적극적 의미를 실현시키려는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연구가 군사연구소나 군비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한 평화연구의 독립성과 학문적 객관성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 비판적인 평화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 보수적인 평화연구, 안보, 전략적인 평화연구를 비판하면서 비판적 평화연구가 얻어낸 중요한 개념은 평화에 관한 적극적 개념이다. 평화란 것을 단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태(Abwesenheit des Krieges)로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조용한 상태나, 표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듯 이들은 평화(peace, Friede)가 아니라 평정(平静, pacification, Befriedung)이라고 개념적으로 구별했다.<sup>14)</sup> 평화연구를 평정상태를 이루는 조건에 관한 연구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한 평화연구는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얻음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요인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특히 갈등이 주장했다.<sup>15)</sup> 갈등에게 있어서 이 요인은 바로 폭력이다. 그래서 갈등은 평화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해서 폭력이 없는 상태(Zustand von Gewaltlosigkeit), 그리고 사회정의의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평화연구란 곧, 폭력이 없어지는 조건과 과정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하면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느냐에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런

12) 위의 책, 114, a. a. S. 273

13) Herman Schmid, Friedensforschung und politik, in : Dieter Senghaas, Kritische Friedensforschung, 위의 책, S. 25

14) Lars Dencik, Plünder für eine revolutionäre Konfliktforschung, 위의 책, S. 252

15) Johan Galtung, Theorien des Friedens, 위의 책, S. 235

데 갈등은 여기서 다시금 폭력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구조적인(structural) 폭력이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폭력은 사담에게 가해지는 육체적인 가해나 고문, 살상감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폭력이지만,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개인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말한다. 어떤 사회나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배고파 죽는다면, 이것은 보이는 사람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회구조가 죽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의 문제를 바로게 이해하려면, 물리적,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을 철저히 이해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갈등은 주장한다.<sup>16)</sup>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갈등에 있어서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보이는 전쟁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 평화는 잠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까지 없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그러면 평화를 적극적 의미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사회구조가 가진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면, 이것은 곧 사회정의의 실현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평화는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게 하는 모든 구조적인 폭력들, 즉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탄압에서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비판적 평화연구에 있어서 갈등이 세운 중요한 공헌은 바로 구조적 폭력의 개념을 발전한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 일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전쟁과 살인, 고문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굶주림과 질병,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사람이 더 많다. 2차대전이 끝난 뒤(1945)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은 130여회나 되고, 여기서 죽은 자는 3천 2백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UNESCO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1천 5백만명이나 된다. 이것을 보면 가난한 나라들, 제 3세계의 평화문제는 전쟁을 없애는 문제 보다 가난과 질병, 억압과 착취 등 구조적 폭력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4. 80년대 반핵평화운동의 철학

이제까지 우리는 평화의 문제가 종교적 기원이나 철학적 명상으로부터 윤리적 실천 운동으로 발전했다가 다시금 국제 정치적인 전략의 문제로,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대상

16) Johan Galtung, Gewalt, Friedensforschung, 위의 책, S. 85

으로 전개되어간 자취를 대강 살펴보았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적 평화연구는 60년대와 70년대에 와서 비판적 연구로 발전하여 강대국들의 안보 전략적인 평화연구와 평화정책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게 되었다. 평화문제를 부각시키고 실천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윤리적인 평화운동은 과학적인 평화연구와 정책들의 대거 등장으로 추종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다. 그래서 2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1차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보다 평화운동이 피조환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평화문제는 양심적 인사들의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후 수십년 동안 보편적 인식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1980년대에 와서 갑자기 서구를 중심으로 평화운동이 전세계 일어나고, 이 시민적 운동과 범세계적 운동이 정치적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고 마침내 동서관계와 국제정치 역학관계에도 근원적인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80년대 초에 영국·독일·네덜란드·스칸디나비아반도 등 유럽에서 수시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평화운동의 시위에 참가하고 핵무기의 철거를 외친 일은 예전에는 전무했던 일이었으며, 평화운동의 역사에도 중대한 시점(時點)을 이룬 획기적인 것이었다 하겠다.

이 80년대 대규모적인 평화운동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9년 브뤼셀의 나토 각료회의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인 피싱II와 크루즈 미사일 572기를 서유럽에서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반핵운동 단체들이 미국의 나토 군비 강화정책과 내장감염에 반대하며 군축의 원칙과 예산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어 중거리 핵미사일 증가배치 반대 운동으로 순식간에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 서독이나 영국 수도에 전국 각지에서 백만 명이 물러들어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운동이 벌어졌다. 마침내 국회의원과 정부 고료들까지도 평화시위에 참석하는 결과가 생겼다.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의 요구와 압력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이미 결정된 미사일 추가 배치를 저지하지는 못했으나, 이 운동은 80년대 동서 의 신(新)태양트를 촉진하고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INF)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開放) 정책이나, 80년대 말 동구권의 변혁 물결도 80년대 초 서구 시민들에 의한 평화운동이 없었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구의 민중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은 단순한 중거리 핵무기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반핵 시위에 그친 것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와 교회, 노조, 정당, 여성단체 등 가계에서 핵전쟁, 동서갈등, 환경과 생존, 군수산업과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보노리 등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것은 냉전시 대 30여년을 지배해온 군사력의 균형이나 우세에 의한 평화유지의 논리를 도전하고 비판하는 반세계적, 세계 변혁적인 성격을 띤 역사적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80년대의 새로운 평화운동은 그 이전의 평화운동과는 성격과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운동은 대체로 전쟁과 비인도적 폭력들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안보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운동은 아니었다. 이처럼 체제 개혁적인 성격을 갖지는 못했으나 80년대의 평화운동은 핵무기 증가나 동서대결의 안보전략에 대한 반대운동을 넘어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도성장, 자본의 독점, 군수산업의 확대, 업적주의와 효율우선주의, 환경파괴, 사회 계층적 분열 및 대립 등 체제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과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폭넓은 운동이었다고 하겠다.<sup>17)</sup> 이 운동이 이렇게 새로운 체제와 의식,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70년대부터 나타난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보고 서나 새로운 환경운동으로서의 녹색당의 출현이 큰 자극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1981년 10월 서독의 수도 본에서 30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벌이고 "해미 사일 대신에 에루틀(Fetting statt Pershing)", "동과 서에서 군비 축소(Für Abrüstung in Ost und West)"이라고 외치며 반핵시위를 벌였을 때만 해도, 서독의 정부나 정치가들은 이를 반체제적인 이적행위로 보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당(CUS)의 집머만(Friedrich Zimmermann)은 공산당의 작용이라고 했고, 기민당(CDU)의 당수 콜(helmut Kohl)은 독일공산당의 핵심세력이 작용하는 인민전선이라고 했고, 집권당인 사민당(SPD)의 수장 슈미트(Helmut Schmidt)마저도 안보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운동이라고 위협시켰다. 평화운동이 평화의 위협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핵무기의 배치와 군사력의 우세를 통해서 적의 도발을 막고 전쟁을 저지시킨다는 안보전략과 철학을 가진 서방측 정치가들은 평화 운동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서구의 정치가들이나 안보전략가들이 평화운동을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적행위로, 비현실적인 낭만주의로 몰아붙이는 그러한만 이유가 있다. 그것은 동서대결과 같

17) Peter Schlotter, "Zur Zukunft der Friedensbewegung. Rahmenbedingungen alternativer Politik", in: Reiner Steinweg(Hrsg.), Die Neue Friedensbewegung, Suhrkamp, Frankfurt, 1982, S. 17.

18) Eberth Jahn, "Friedensforschung und Friedensbewegung", 위의 책, S. 151



등의 체계 속에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한다는 군사균형(balance of power)론과 핵공격 위협에 의한 전쟁억제(nuclear deterrence)론을 평화운동이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안보정책이나 군사전략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체계유지에 핵심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철학을 비판하고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은 단순히 핵무기 추가 배치만 반대할 뿐 아니라 핵무기 자체를 없애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동서 진영을 화해시키고 통합시키자는 무기 없는 평화의 철학과 논리를 주장했다.

평화운동의 이러한 철학은 평화주의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판적 평화연구의 태도와 이념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핵무기가 결코 안보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독일에서도 이미 50년대 후반부터 있었다. 독일의 전후 재부흥과 나토 가입 및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사민당원, 노동조합원, 지식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평화운동 집회들이 많이 열렸다. "핵을 죽음으로 몰리치지자(Kampf dem Atomtod!)"는 대중운동도 있었다.<sup>19)</sup> 당시에 반핵평화운동을 이끈 사람은 철학자나 과학자, 종교인들의 윤리적 호소였다.

야스퍼스(Karl Jaspers)는 1957년에 쓴 책에서<sup>20)</sup> 핵무기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칸트의 도덕철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무기를 반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만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성명서가 잇달아 나왔다.<sup>21)</sup> 특히 패전 독일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핵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 한(Otto Hahn), 보른(Max Born), 바이르체커(C.F. von Weizsäcker) 등 저명한 핵과학자 18명이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실험하고 배치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명한 피팅겐 선언을 냈다.<sup>22)</sup> 이 선언은 핵무기에 대한 의식제동과 평화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핵무기에 반대하는 대중들이 시위를 벌이고, 특히 매년 부활절마다 진행된 반핵시위에는 많은 군중들이 정파나 종교,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의 냉엄한 동서냉전의 현실 속에서 이런 평화운동과 윤리적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당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은 과학자들의 반핵선언이 나온 뒤 인터뷰에서 "이 선언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는 여기서 서명한 사람들(과학자)이 갖

19) Hans Karl Rupp, *Außerrparlamentarische Opposition in der Ära Adenauer. Der Kampf gegen die Atombombardierung in den fünfziger Jahren*, Köln, 1970.

20) Karl Jaspers, *Die Atombombe und die Zukunft des Menschen*, München, 1958.

21) Einstein Russell Manifest am 9. Juli 1955.

22) Mainauer Kundgebung der Nobelpreisträger, vom 15. Juli 1955.

23) Erklärung der 18. Atomwissenschaftler vom 12. April 1957.

지 못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날스에 부치고 말았다. 냉전시대의 대결과 안보 정책이 정착되어 가면서 반핵평화운동은 소수의 평화주의 운동그룹이나 전쟁통사(간부) 반대자들, 평화회의 회원들에 국한된 운동으로 감소화하고 말았으며, 70년대 말까지 대중들로부터는 별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sup>23)</sup>

80년대에 와서 반핵평화운동이 대규모적인 민중운동으로, 반냉전체제 운동으로 성공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용인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스퍼스가 지적했던 대로 사고방식의 전환, 즉 철학과 가치관의 전환이 대중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60년대말 이후에 일어난 비판적 평화연구가 일으킨 반상의 전환과 대중의식 계몽이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비판적 평화연구는 군사력의 강화와 핵공격의 위협을 통해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억압과 수탈의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면서 저항과 변혁을 억누르는 위협체제의 안보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80년대의 대중적 평화운동이 냉전시대의 안보정책과 핵무기 보유를 통한 평화유지론에 대항해서 제시했던 새로운 철학과 대안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이었던가? 세 가지로 요약해 살펴보자.

첫째로, 냉전시대 30여년동안 지배해 왔던 안보의 철학을 비판하고 부정한 새로운 의식이었다. 그 동안 동서냉전과 국제정치에는 '힘의 우세를 통한 평화'라는 것이 지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군사력의 강화와 우수한 핵무기의 개발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일 뿐 평화의 보장책은 아니다. 한쪽이 힘의 우세를 유지했을 경우에 다른 쪽이 무력을 증강하지 않거나 열세로 있으면 평화가 보장될지 모른다. 상대방은 불안해서 반드시 좀더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쪽이 무력을 개발하거나 증대하거나 증대하는 이쪽이 불안하거나 오히려 이쪽보다 어떤 면에서 우세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이 불안해서 다시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사력 우세에 의한 평화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군사력 강화를 유도하게 되며, 아무리 강화해도 안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의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바이르체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두개의 서로 불신하는 적대국가는 항상 상대방보다 강해야 안전을 느끼는 법인데, 양편이 모두 동시에 상대방보다 강해야 한다는 조건은 영원

23) Andreas Baro, "Kann die neue von der alten Friedensbewegung lernen?", in: Reiner Steinweg(Hrsg.), 위외 책, S. 102.

히 성립될 수 없다."<sup>24)</sup>

둘째로, 평화운동가들이 반핵추진이나 군비감축의 요구를 할 때 항상 부딪치는 문제는 군사균형의 이론이다. 적이 무장을 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전략가들은 군사력이 균형되어야 전쟁이 안 터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핵무기도 화학무기도 개발하고 배치했다. 그러나 독일의 사민당 지도자이며 평화운동가인 에플러(Erhard Eppler)는 위협에서 벗어난 길이란 곳에서 군사균형을 비판했다.<sup>25)</sup> 그는 군사전문가들의 발인을 인용하면서 "군사적·무력적 균형이란 결국 군비 증강을 할리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브뤼셀 수재 나토 연락사무장이었던 켈프(Leslie Gelb)는 1979년에 "지난 30년동안 미국과 소련은 군사균형이라는 원칙 위에 군비축소 협상을 해왔지만, 결국은 이것이 군비의 엄청난 증강과 경쟁을 할리화시켜 준 결과만 초래했다"<sup>26)</sup>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말로는 군사균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늘 군사력의 우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가령 공군력이 좀 우세하고 해군력이 좀 약하면 전체로서는 군사균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해군력도 상대방보다 우세하거나 같은 수준이 되어야 군사균형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불리한 경우를 가정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군비를 갖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군사균형이 아니라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며,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해서 끊임없이 무력경쟁의 상승작용을 낳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셋째로, 이러한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체계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상을 회복하고 무기를 감축해서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안보 전략과 평화연구를 과학적으로 해도 결국은 구약성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호소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다. "갈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길만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현재의 불안하지만 억지로라도 유지되고 있는 경쟁부재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군비를 감축하고 핵무기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80년 평화운동이 만들어준 대안적 정책은 계산된 일방적 감축이다.

24) C.F.A. Weizsäcker, "Zwölf Thesen zur Kernwaffenrüstung", in: *Die Zeit*, 10. 11. 1979, S. 11.

25) Erhard Eppler, *Wege ans der Gefahr*, Rowohlt, Hamburg, 1981.

26) *Aufrüsten, um abzurüsten?*, hrsg. von der Studiengruppe Militärlpolitik, Reinbeck, 1980/1981, 171, S. 117.

27) Stephan Tiedke, "Wider den kurzen Atem. Thesen zur Sicherheitspolitischen Strategie der Friedensbewegung", Reiner Steinweg(Hrsg.), 위외 책, S.38.

축 핵무기의 감축을 상호협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면 SALT 회담의 경험에서처럼 무한정 시간을 끌고, 그 동안 새로운 다른 무기를 개발해놓고 옛날 구식 무기를 감축하는 형식적 무기 감축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일방적 감축은 안보에 위협이 없을 만큼의 무기를 계산해서 이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감축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감축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가령 서독의 핵무기가 6천기인데 여기서 1백기쯤 감축했다고 당장 핵전쟁이 날 위험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동독과 소련측이 자연히 1백기를 감축하게 되고, 그 다음엔 이쪽에서 5백기를 감축한 뒤 저쪽에서도 5백기를 감축하면, 1천기를 다시 감축하는 유도를 해서, 핵무기를 완전 철거까지 감축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정책이다.

치구를 이미 열일곱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은 핵무기, 1만5천 메가톤이 넘는 핵무기를 장비하고서도 안보의 위협 때문에 또 새로운 핵무기와 위성발사까지 고안하고 있는 오들의 상황에서 인류를 구제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다. 더구나 핵무기 보유국가와 핵개발능력 보유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막지 못하면 핵무기 증대를 막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평화연구가들에 의하면 역사상 만들어 놓은 무기는 다 쓰이고 말았다고 한다. 핵무기도 만들어 쌓아놓으면 인젠가는 쓰게 되고 말 것이라 것이다. 그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는 일찍이 "3차대전과 핵전쟁의 원인은 그 준비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핵전쟁의 준비 자체를 막지 못하면 핵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핵무기 개발과 증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엄청난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6천억 불에 달하는 군비, 때때로 1백만불 이상을 없애는 군비증강에 매달리면서 세계는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1천5백만의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군비에산의 1백분의 1만 들어도 이 모두를 살리고 남는데 인류는 아직 이만큼 생존과 인간애의 지혜와 윤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바이르체커의 말대로 과학기술 시대의 생존의 조건은 평화인 것이다.

## 5. 냉전 이후 갈등의 문명적 해결

냉전시대의 평화연구는 긍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평화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관한 연구보다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absence of war and violence)라는 부정적 개념 정의에 의거하여 전쟁과 폭력을 제거하는 방법, 전쟁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관한 연구



로서 수행되어 왔으며,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 폭력이나 전쟁의 상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전박을 탐구하는 소극적인 연구가 추종을 이루어 왔다. 이념과 체제의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었던 동서냉전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전쟁이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혹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국지적으로 머물게 하며,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과 전략, 핵무기를 쓰는 것을 억제시킬 것인가, 평화한 무기 같은 무차별적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전략의 탐구에 중점을 두었다.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해소하며, 지배와 억압이 없는 공존과 협력의 모색하는 적극적 평화에 관한 연구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며 별로 성과 있는 연구나 노력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에 와서 소련과 동구의 공산체제가 붕괴되어 동서냉전 체제가 해소되고, 이데올로기적 해계모니가 무의미하게 되자,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근본적 모순과 갈등의 토대 위에서 전쟁과 폭력적 충돌의 방지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평화연구는 그 대상을 잃게 되었으며, 냉전의 해소와 함께 평화연구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이런 의구심 팽배했던 90년대 초의 유럽에서는 적어도 동서의 분단과 갈등의 틀 안에서 추구되던 평화연구나 평화전략들, 예를 들며 "위험과 긴장 완화"라든가 "상호안비통제"(arms control), "증립화 방안", "비동맹전략", "공동안보"와 같은 주제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대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sup>28)</sup> 적 (enemy)의 개념이 없어진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전체의 연합과 공동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의 구조를 보다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연구나 평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서갈등체제가 종식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평화연구나 운동의 필요성은 결코 소멸하거나 감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사라졌으나 대신 민족적 지역적 문화 종교적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었고 피롤리는 열전 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걸프전쟁으로 중동대전이 터질뿐 하였고, 보스니아와 체첸, 소말리아, 르완다에서 종족간의 전쟁이 거칠게 터져 나왔으며, 사회 내적인 폭력과 갈등도 더욱 증가되고, 자주 나타났다.<sup>29)</sup> 냉전체제는 나름대로 양대 진영의 초강대국의 통제

28) Dieter Senghaas, "Friedensforschung an der Schwelle der neunziger Jahre" in : Jörg Calleß( Hrsg), Weltsystem und Weltpolitik, Evangelische Akademie Loccum, 1991, pp. 383-101

29) Wolfgang Vogt, "Den Frieden in Europa erforschen und gestalten. Herausforderungen an die Friedensforschung und Friedenspolitik nach 1989/90.", in : Österreichischen

와 영향 속에 민족이나 지역, 문화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두 슈퍼 파워의 체제수호를 위한 통제가 사라진 공간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은 고삐 풀린 말들처럼 날뛰게 되었다.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위기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평화연구의 당위성과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서냉전체제가 사라진 이후의 평화연구는 냉전시대의 연구와는 내용과 중점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산 큰 전쟁의 위험이나 긴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평화연구는 무력충돌이나 전쟁을 예방하는 조건과 전략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발달될 필요는 없으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을 순화시키거나,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에 더 중요한 관심과 의미를 두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상황의 변화로 인해 평화연구의 중점이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평화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의 방지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론 갈등이나 대립의 요소가 제거되고, 보다 더 긍정적인 평화의 구조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추구하는 탈냉전시대의 평화는 어떻게 하면 갈등과 폭력이 생기지 않는 사회적 평화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폭력이나 마찰이 없이,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주로 연구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여기서 평화연구의 중심 과제는 갈등연구에도 옮겨지게 되며, 갈등의 보다 문명적 (Zivilisierung, 개화적, 교양적) 처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어느 사회, 어느 지역, 국가에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며, 인간사회에는 계속 새로운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자면 갈등을 야만적으로가 아니라 보다 문명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연구에 문명화(Zivilization)라는 긍정적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문명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평화를 만드는 길임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평화연구가 마치 문명화의 과정이나 내용 방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sup>30)</sup> 그래서 예를 들면, 인권과 부지와 자유, 소독, 여가생활 등이 확장되면 보다 더 문명화된 상태로 규정하고, 독재와 억압, 지배, 빈곤, 파로, 강제성 등의 지수가 높아지면 문명적이나 상실했다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며,<sup>31)</sup> 이것이 평화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갈등의 문명적 해결책으로 뱃가스는 폭력의 사유화금지, 범죄국가, 상호규제,

Studienzentrum für Frieden und Konfliktlösung(OSFK) (Hrsg.), Frieden durch Zivilisierung? 1996, Münster, S. 22

30) Wolfgang R. Vogt, "Zivilisierung und Frieden", 위의 책, S. 91-135

31) 위의 책, S. 109

민주적 참여, 사회정의, 건설적 갈등의 문화 등 여섯 가지로 제안하여, 구조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sup>32)</sup>

32) Dieter Senghaas,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in : Wolfgang Vogt(Hg.)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Baden Baden, 1991/95, (Vivilisatorisches Hexagon)



Kw →

#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민식(강원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 요약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을 분석 정리하고 앞으로의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평화연구의 현황을 분석 정리하는 데에는 평화개념의 확장과 평화운동의 다변화, 국제질서의 변화를 변수로 냉전시대(1945-1970), 데탕트 및 신냉전시대(1971-1989), 탈냉전시대(1990-현재)로 나뉘도록 시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냉전시대는 평화연구가 형성 분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주로 전쟁문제를 다루던 1950년대의 미국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와 전쟁문제를 넘어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제기했던 1960년대 갈롱(John Galtung)이 주도한 북유럽 중심의 '비판적 평화연구' 그리고 '비판이론'에 토대를 둔 독일중심의 '네오 마시스트적 평화연구'가 주요흐름을 형성하였다.

데탕트 및 신냉전시대는 동서냉전 이외에 남북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평화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발전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게로까지 그 연구가 확산되었다.

탈냉전시대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급변하는 모습 속에서 안보개념이 보다 다변화, 다원화 되고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면서 평화연구의 영역이 보다 확장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평화연구의 형성 분화 발전과정은 결국 평화연구가 '평화

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의 성장 발전과정이었다. 21세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의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할 주요과제는 첫째, 평화를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내면화시킬 것인가 즉 평화문화의 정착이다.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부적 실천적 과제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교육, 미디어 매체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 간 대화존중, 평화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이 있다.

둘째, 어떻게 평화와 안보를 확보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 즉 평화와 안보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 실천적 과제로는 기존의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분석, 군축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인간안보와 지구안보에 대한 집중적 관심, 유엔 헌장에 따른 유엔의 제반 평화유지 및 평화지원 활동, 현재 유엔의 권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기구의 모색, 그리고 세계화의 윤리적 토대 구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평화연구자, 평화운동가, 평화교육자들의 보다 진지한 노력과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 1. 머리말

20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인 1901년에 제1회 노벨평화상 제정은 그때까지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현실에서 평화에 대한 인류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의 상정적으로 잘 나타나 주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발전으로 첨단살상무기 개발이 가능해진 20세기는 지난 세기에 비해 더욱 참혹해진 전쟁의 폐해에 시달려야 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참사와 이어지는 가공할만한 핵무기의 위협은 지속적인 인류

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고대 이래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어온 인류역사에 있어서 평화는 영원한 화두였다. 평화는 전쟁으로 고통받은 인류에게 소망스러운 삶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동시에 조건이었다. 이러한 평화문제가 개별 국가의 보다 구체적인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였다. 특히 근대 국가 체제 출범의 계기가 되었던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로 개별국가간의 안보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화는 안보와 동일한 영역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평화연구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으로부터의 자극과 영감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가 조직화된 평화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20세기는 조직화된 평화연구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sup>1)</sup> 초기 평화연구는 전쟁연구가 주축을 이루었다. 1951년 전쟁학(Polem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프랑스인 부를(Gaston Bouthoul)은 지금까지 하나의 사회현상(social phenomenon)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이해하라."고 갈파 하였다.<sup>2)</sup> 그런데 점차 평화의 개념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아울러 평화운동도 단순한 반전운동을 넘어서 빈곤, 기아, 핵무기, 환경, 여성, 인권문제 등으로 그 관심영역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평화연구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되었다. 이제 전쟁의

1) Javier Perez De Cuellar(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vol.1, p. xxxviii (New York: OCEANA Publication, Inc, 1999).  
2) Ibid: 부를은 과거 군사학에서의 전통적인 전쟁연구는 주로 전략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집중되었다고 지적한다.



의뿐만 아니라 평화의 조건까지 탐구 하게 된 평화연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평화연구는 평화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대해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을 추구하는 점에서 다분히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 성향을 갖는다. 이것은 어떠한 평화의 개념 속에도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실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sup> 아울러 평화연구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필요 없이는 국내적-국제적인 사회구조의 창출과, 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고, 사회적 창의성을 구제화 할 수 있는 국내적-국제적 질서형성을 구상하고 모색하는 점에서 정책 지향적 성향을 갖는다.<sup>4)</sup> 따라서 평화연구는 이러한 성향들의 상호연관적인 과제를 함축하는 복합적인 학문 활동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평화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의 평화연구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평화연구의 현황을 분석·정리 하는 데에는 평화 개념의 확장과 평화운동의 다변화, 국제질서의 변화를 변수로 냉전시대, 데탕트 및 신 냉전시대, 탈냉전시대로 나름대로 시기구분을 적용하였고,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평화연구 현황도 자료수집 가능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커다란 흐름들을 정리하였다.

3) 일본평화학회(편), 『평화학-이론과 실제』(서울: 문우사, 1987), pp. 18-21.  
4) Carolyn M. Stephenson, "Peace Studies, Overview," Lester Kurtz(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vol.2(London: Academic Press, 1999), pp. 810-811.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파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의 발족과 이에 따른 과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조직의 결성이 반전 국제여론을 선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원폭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에서는 1955년 제1회 세계 원수폭금지 대회가 열렸으며, 서구 일원에서는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5)</sup> 이 같은 활발한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강요하게 되었고, 결국은 능동적인 평화연구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물론 반전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던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평화연구도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고대로부터 축적되어온 평화사상의 지속적인 영향이다. 사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가 집단과 조직을 이루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온 이래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이어져 왔다. 사상은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통찰력(Insight)과 지혜(Wisdom)를 제공해 준다. 혼란하고 불안한 사회상황 속에서 사상은 뚜렷한 판단지침을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화사상은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에서마다 평화회복을 위한 가치관 단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상적으로 평화사상은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적실성을 갖는 것은 근대 이후 등장하게

5)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로 불리우는 미국의 퀘이커파, 메노나이트파 등의 기독교 분파 세력을 말한다.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pp. 27-32.

## II. 평화연구의 출범배경

양차 세계대전에 걸쳐 자행된 엄청난 인명살상과 참혹한 파괴의 참상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 커다란 회의와 불신을 가져다 주었다. 나치즘과 파시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집단광기와 집단폭력은 인간의 악마성과 야수성을 여지없이 폭로해 주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도 인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전쟁의 진원지였던 국가들에서 전쟁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평화운동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동서 냉전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에 의해 인류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면서 평화운동은 각종 평화교육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 되었다. 특히 새로운 무기체계인 핵무기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관계가 조직됨으로써 평화연구를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평화연구가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에 대한 학문적 탐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연구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전쟁의 방지와 특히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반전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혹한 핵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 가지 모임과 조직들이 활발하게 결성되도록 하였다.

된 평화사상들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제국론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단계에서부터 에라스무스,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생-피에르, 루소, 벤담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 평화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는 공리적 관점이다.<sup>6)</sup>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전쟁이란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화"의 총칭이며 "평화는 인간 상호간의 우애"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되거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군비와 전쟁의 비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종교적,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복지라는 인간의 공리적 측면에서 파악했다.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인간이 자연법을 준수하는 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생명의 가치, 무력의 우열, 전쟁이 국민에게 끼치는 문제 등의 지적을 통해 전쟁 억제론을 권고했다.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 들은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조건을 규명하고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건설로 평화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홉스(Thomas Hobbes)는 평화를 전쟁상태의 부재이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로 인식하고 동의에 의해 성립된 튼튼한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의 평화를 강조했다. 로크(John Locke)는 평화를 정치적 작위의 산물로 보고, 국내정치에서의 평화는 계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상황에 따른 지도자의 정치적 사려로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인민주권에 근거

6) 이하 근대평화사상에 관한 언급은, 최상용, "근대사상의 평화사상",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pp. 13-40; 최상용,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나남1997)을 주로 참고하였다.



한국내체제의 변혁 및 민주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근주의 이성에 의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은 생-피에르(Saint-Pierre)는 전쟁의 불이익과 평화의 이익을 인민은 물론 군주가 각각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Jeremy Bentham)은 전쟁은 반도덕적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회피하려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 '최대규모의 해악'이며 '모든 악의 복합'이라고 역설하고 식민지의 독립 민족자결, 권력정치에 대한 비판과 여론의 중시 등을 강조했다. 철학적·규범적 평화연구에서 가장 체계적인 저술인 『영구평화론』을 남긴 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에 이르는 인류의 노력을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이성적 필연으로 보고, 영구평화를 인간이 끊임없이 접근해야 할 정치적 최고선으로 보았다.

셋째, 전후 활기차게 등장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과학적 평화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폴란드의 경제학자 드블록(Jean de Bloch)은, 이미 1898-1900년 사이에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 기술,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미래의 전쟁을 분석한 전6권의 대작 『전쟁』을 출간한 바 있다.<sup>7)</sup> 이러한 선도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은 양자대전 사이에 몇몇 서구의 주요학자들에 의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전쟁연구에서 보다 고무되고 발전된 형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소로킨(Pitrim Sorokin), 라이트(Quincy Wright), 영국의 리차드슨(Lewis Richardson), 네덜란드의 드 리히트(Bart de Ligt)등이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소로킨과 리차드슨은 처음으로 사회현상으로서의

7) Jean de Bloch, 『La Guerre: Traduction de l'ouvrage russe 'La guerre future aux points de vue technique, conomique et politique』, 6 vols., Javiet Perez De Cuellar, op.cit. p. xlbs(Paris: Guillaumin, 1898-1900).

195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냉전 시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평화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평화연구운동'(Peace Movement)이라 불릴 정도로 그 연구 열기가 뜨겁고 적극적이었다.<sup>10)</sup> 이 시기 연구의 기본적인 특징은 20세기에 들어와 두 번씩 겪은 세계대전의 엄청난 영향 속에서, 미국과 소련간의 대규모 핵전쟁이 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대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1)</sup> 냉전시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평화연구는 주로 북유림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구 주제목할만 한데, 그동안의 미국 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2)</sup> 이 시기 연구의 기본적인 특징은 동·서 냉전체제가 서서히 완화되고,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여, 남북분체가 점차 제기되는 가운데 평화연구가 지역적으로 확산되며, 평화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 먼저 1950년대 미국이 주도했던 '전통적 평화연구'의 흐름을

10) Kenneth Boulding, "The Philosophy of Peac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Third Conference vol. I, *Philosophy of Peace Research*(Assen: Van Gorcum, 1970), pp. 5-19.  
11) 허영선, "새로운 국제 정치이론을 찾아서: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21(1984), pp. 3-11.

12) 한 연구자는 평화연구의 흐름을 미국 중심의 평화연구를 '전통적 평화연구'라고 이 주도했던 북구 중심의 평화연구를 '비판적 평화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Kenneth Boulding은 미국 중심의 평화연구를 narrow school, 북구 중심의 평화연구를 broad school로 분류하였다: 조현석, 『평화개념의 현대적 전개에 관한 고찰』-J. Galtung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Kenneth Boulding, "The Philosophy of Peace Research," op.cit., pp. 5-19.

전쟁에 대한 주요연구를 시작했고 드 리히트는 1938년 그의 저서 『평화학 입문』(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peace)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1942년에 초판이 출간된 라이트의 『전쟁의 연구』(A Study of War) 전2권은, 독창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계량적 조사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sup>8)</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학문연구방법에 있어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이 등장 함으로써 보다 세련되고 체계화된 평화연구의 분석틀이 갖추어 지게 되었다.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의 입장에서 인간 행위의 여러 결정요인을 연구 분석하는 이 새로운 경향은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 인접학문 분과의 학제간 연구를 촉발 시켰고, 향후 평화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확장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9)</sup>

### III. 평화연구의 현황

#### 1. 냉전시대(1945-1970)

앞서 언급한 배경에서 출범한 평화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냉전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8) 라이트는 1926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위원회'의 '전쟁원인 소분과 위원회'의 의장으로 7년동안 계속 25명의 연구조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66가지의 연구과제가 담긴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Quincy Wright, *A Study of Wa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1965).

9) David J. Dunn, "Peace Research," Trevor Taylor(ed), *Approaches and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London: Longman, 1978), p. 261.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연구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56년 미국의 미시건(Michigan)대학에 '분쟁해결연구소'(Center for Research and Conflict Resolution)가 설립되고 그 이듬해인 1957년에 전쟁과 평화에 관한 '최초의 전문 학술지인 『분쟁해결논집』(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1972년 이후에는 예일(Yale)대학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계속 간행되고 있는 이 학술지에는 라이트(Quincy Wright)와 리차드슨(Lewis Richardson)의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연구의 전통을 계승하는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이 전문가들은 1950년대 초반 스탠포드(Stanford) 대학의 「행동과학고등연구소」(Center for Advanced Study in Behavioral Science)의 '평화연구' 모임의 주축 멤버들로서 볼딩(Kenneth Boulding), 도이치(Karl Deutsch), 라스웰(Harold Lasswell), 싱거(David Singer), 라포포트(Anatol Rapoport), 켈만(Herbert Kelman), 크류크론(Clyde Kluckhohn) 등을 꼽을 수 있다.<sup>13)</sup> 이들은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생물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지만, 인간의 행동으로서의 사회현상이 관찰 가능하고 열미든지 통제화, 수량화 할 수 있으며, 전쟁과 분쟁도 객관적 방법에 의해 제어·관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학제간 연구의 토대위에서 또 다른 세계대전의 위험을 막아 보자는 지적 노력 이외에 이 시기 미국의 평화연구에서 주목할 평화연구의 흐름은 '평화연구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렌츠(Theodore F. Lentz)의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인 평화주의자의 그룹을 들 수 있다.

13) Paul Rogers and Oliver Ramsbootham, "Then and Now: Peace Research: Past and Future," *Political Studies*, XLV II(1999), pp. 740-754.



이미 1945년에 미국 최초의, 평화연구 기관이라 할 「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Laboratory)를 설립하고 1955년에는 「평화학을 지향하며」(Toward a Science of Peace)라는 저술을 통해 헨츠는, 핵무기 위협 시대에 있어서 평화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4)</sup> 이러한 헨츠의 실천적 노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북유럽 등의 평화연구 기관들이 설립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1970년에 설립된 세계최대급의 평화학회인 「평화연구, 교육, 발전 협의회」(Consortium on Peace Research, Education and Development)에 속하는 많은 연구자, 교육자, 활동가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1960년대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비판적 평화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노르웨이의 탁월한 연구자인 갈통(Johan Galtung)에 의해 주도된 북유럽의 평화연구는 그동안 미국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평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sup>15)</sup> 1959년 오슬로 대학 「사회연구원」(Institute of Social Research)에서 「분쟁과 평화연구」(Conflict and Peace Research)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갈통의 헌신적 노력으로 1963년 1월과 9월에 각각 「제1회 북유럽 평화연구학회」와 「유럽 평화연구학회」가 모두 오슬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sup>16)</sup> 1964년에는 북유럽 평화연구를 선도하는 「평화연구논집」(Journal of Peace Research)이 창간되었으며, 갈통의 「분쟁과 평화연구」 프로그램은 1966년 「오슬로 평화 연구소」(PRIO: Peace

14) 노르웨이 평화학회(벤), 이경희(역), 앞의 책, pp. 28-29; Theodore F. Ientz, *Toward a Science of Peace*(London: Halcyon Press, 1955).

15) 갈통, 1963년에 「미국 평화연구 협회」(US Conference on Peace Research)

연구 논의를 진전시켜,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부재와 「전쟁 평화와 사회정의」라는 의미에서의 구조적 폭력의 부재인 직접적 폭력을 함께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9)</sup> 갈통이 제시한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북유럽의 '비판적 평화연구'의 핵심개념으로, 이후 평화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와 북유럽 중심의 '비판적 평화연구' 경향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1960년대 말 등장해 이 두 경향 모두를 비판하던, '네오-막시스트(Neo-Marxist) 평화연구' 경향이다.<sup>20)</sup> 슈미드(Herman Schmid)등이 주도한 '네오-막시스트 평화연구'는 1960년대 말 미 소냉전관계가 완화되면서 핵전쟁 위험성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된 반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고전과 1968년 체코의 자유화 운동에 대한 소련의 무력침공으로 인한 동구권의 동요 가운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초강대국간의 대립이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갈등과 이해의 충돌이란 인식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슈미드는 1968년 발표한 논문 "평화연구와 정치"에서 지금까지의 평화연구 핵심은 기존의 국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통제와 동시에 이 체제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통합의 문제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연구는 '드러나 있는 분쟁'(manifest conflict)을 어떻게 통제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져 있는 분쟁'(latent conflict)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가에 있으며, 또한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분쟁이 어떻게 기존의 국제체제를 붕괴할 정도까지 격렬화 되는

19)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Essays in Peace Research*, vol.1(Copenhagen: Christian Eilers, 1975), pp. 109-134.

20) 조현석, 앞의 글, pp. 27-37.

Research Institute Oslo)로 독립·발전하였다.<sup>16)</sup> 1965년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에서 열린 최초의 「국제 평화연구학회」 역시 갈통의 주도적 역할로 추진된 것이었으며 이후로 「오슬로 평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의 평화연구가 「국제 평화연구학회」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스웨덴 에서는 150년 동안 스웨덴에 평화가 지속된 것을 기념하여 1966년에 뒤르달(Gunnar and Alva Mirdal)부부등의 노력으로 「스톡홀름국제 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설립되었고, 핀란드 에서는 1969년에 탐파레(Tampere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설립되었다.<sup>17)</sup>

미국 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에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갈통은 1964년 「평화연구논집」창간사에서 전쟁의 부재라는 평화 개념은 소극적 차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인간사회의 통합이라는 적극적 차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기존의 평화개념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확장하였다.<sup>18)</sup> 이 시기에 점차 남북문제가 등장되기 시작되는 상황에서 북유럽의 평화연구자들은 이후로 평화연구의 중심테마로서 전쟁보다는 더욱 일반적인 폭력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 전쟁은 직접적 폭력이고, 빈곤, 억압, 인종차별, 무질서, 문맹, 기아, 인권탄압 등은 구조적 폭력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 평화연구'가 이 같은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외면한 채 분쟁, 회피 등의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갈통은 1969년 발표한 논문 "폭력, 평화, 그리고 평화연구"에

16) 일본평화학회(벤), 이경희(역), 앞의 책.

17) Rogers and Ramsboorham, *op. cit.*, p. 743.

18) Johan Galtung,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no.1(1966).

가를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21)</sup> '네오-막시스트 평화연구'는 기존의 평화연구가 엄격한 과학적 기반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통제의 기술이고, 이는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평화와 갈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sup>22)</sup>

냉전시대의 이러한 '전통적 평화연구', '비판적 평화연구', '네오-막시스트 평화연구' 흐름은 평화연구가 뚜렷한 학문적 영역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출범한 유네스코(UNESCO)는 1960년대에 들어와 평화연구가 더욱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대학들에서 평화학 학부과정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유럽대학들로 확산되게 되었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조류 속에서도 동서냉전체제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던 이 시기 평화연구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억지전략, 미-소간 군비축소와 긴장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업적이 많이 나왔다. 특히 1965년 브로디(Bernald Brodie)가 주장하고 윌스테터(Albert Wohlstetter), 셸링(Thomas Shelling)등이 이론화 한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은, 미-소 양국간에 핵전쟁을 막는 논리가 되었다.<sup>24)</sup> 같은 해 왈츠(Kenneth Waltz)는 전쟁에 관

21) 위의 글, pp. 19-20.

22) 슈미드는 미국의 평화연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기존 평화연구의 통제와 통합에 대한 그의 비판은 갈등이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평화와 구조적 폭력의 개념을 다듬는데 영향을 미쳤다.

23)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번), 앞의 책, pp. 136-137.



한 탁월한 분석물인 「인간·국가·전쟁」을 발표했고 1965년 라포포트(Anatol Rapoport)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논의도 전쟁방지 노력에 기여했다.<sup>25)</sup> 1966년 설립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는 매년 「세계의 군비와 군축」을 연감으로 발행함으로써 군비와 군비 축소문제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데탕트 및 신 냉전시대(1971-1989)

1960년대 말 핵 강대국 미국과 소련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1972년 미국과 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서냉전 체제는 데탕트(détente) 즉, 긴장완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데탕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는 그동안의 미국과 북유럽에서의 평화 연구가 유럽 여러 나라를 물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등장되기 시작한 남북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이슈로 제기되면서 이 시기의 평화연구는 강대국 간의 분쟁 보다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저개발로 인한 빈곤, 질적 기아, 인권유린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이러한 데탕트 시기에 금이 가고 신 냉전기류가 조성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평

25) 「평화의 군사안보」 하영선(편), 위의 책, p. 209.  
26) Kenneth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Anatol Rapoport, *Prisoner's Dilemma: A Study in Politics and Cooperation*(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7).

## 26) 국제평화 창간호(2004, 12)

「국제 평화연구학회」의 영향 속에서 1971년 스웨덴의 옘살라 대학에 평화와 갈등연구 학과가 설립되었고, 평화주의자들인 케이크 교도들의 지원으로, 1973년에는 영국의 브랫드포드 대학에 「평화학부」(School of Peace Studies)가 설치되었다.<sup>28)</sup> 영국의 주요 평화연구 기관으로는 랭카스터 대학의 「평화학센터」, 「리차드슨 분쟁·평화연구소」, 켄트대학의 「분쟁분석센터」 등을 뽑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은 후원아래 1970년 설립된 서독의 「독일 평화·분쟁 연구협회」는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거듭하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평화연구 기관이 되었다. 특히 서독의 평화연구는 프랑크푸르트파를 이끌던 마르쿠제, 아도르노, 하버마스 등의 '비판이론'적 시각을 기존의 평화연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1974년 「국제평화연구학회」제5차 총회가 인도의 「간디연구소」에서 개최한 것을 계기로 평화연구는 광범하게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중남미 지역이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평화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1977년 「국제평화연구학회」제7차 총회가 개최된 멕시코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평화연구 협의회」가 결성되어 이 지역의 평화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3년 「일본 평화학회」를 창립한 일본은 1975년 유네스코 후원아래 동경에서 아시아 평화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한바 있고 이 모임은 1980년 「아시아 평화연구학회」로 발전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연구 발전을 선도하였다.<sup>29)</sup>

1970년대에 들어와서 동·서의 냉전구도가 완화되고, 남북문제가

28) 김명섭, 앞의 글, p. 138.

29)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화연구는 핵전쟁의 공포와 위협이 다시 강조되면서, 핵문제와 군축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군축교육과 반전평화교육의 강화가 주장되고, 적극적인 반전 평화운동이 국제적으로 조직화 되었다. 평화 연구는 데탕트 및 신 냉전 시대에 와서 「평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그럼 먼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의 평화연구의 주요 흐름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북유럽의 평화연구가 「국제 평화연구학회」의 주류를 형성한 이후로 평화연구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이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서 평화연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평화연구에 있어서 미국 못지않은 국제분쟁연구로 「전쟁학」(Polemology)을 그 내용으로 해온 네덜란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부터 비무장 저항의 체계적 연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학」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위에서 네이메건 대학의 「평화연구센터」와 암스텔담 자유대학의 「평화연구 작업그룹」이 탈 이데올로기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 평화연구운동의 핵심역할을 해온 벨기에는 평화연구, 평화교육, 평화운동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폭넓은 국제 활동을 계속 해온 「비폭력 대인협회」와 루벤 카톨릭 대학의 「평화연구센터」, 브뤼셀 대학의 「전쟁 사회학센터」를 운영해 왔다.<sup>27)</sup>

26) 고대 회람에서는 평화를 Irene 로 사용했다. 블딩은 1978년 「평화학」을 *Irenology* 로 부르거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Peace Studies, Peace Science,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Kenneth Boulding, *Stable Peace*(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1978).

27)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pp. 34-35.

##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 21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갈등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평화개념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평화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갈등은 지금까지 정치·군사적 논리에서 다루어지던 세계질서의 안정으로서의 평화 개념이 적절치 않으며,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세계질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고찰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갈등은 구조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 국제관계에서는 제국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 제국주의로 인해 중심국과 주변국 관계에서 뿐 아니라, 주변국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다.<sup>30)</sup> 결국 갈등은 제국주의 현상을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심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주변국의 종속을 세계적인 평화정착의 과제와 연결시키고 있다.<sup>31)</sup>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독일의 평화연구를 선도해온 쟁하스(Dieter Senghaas)도 종래의 동·서 분쟁이나 남북분쟁 등의 제한된 도식화로는 현대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성격에 연유하는 다양한 분쟁양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구조적 폭력의 개념을 인용해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지배적인 분쟁양태를 신진지본주의 국가간의 분쟁, 동·서간의 분쟁, 신진공업국이라는 중심과 제3세계라는 주변간 분쟁, 사회주의 국가간 분쟁, 제3세계 국가간 분쟁 등으로 지적하였다.<sup>32)</sup> 이 시기에 또한 갈등 못지않은 탁월한 평화연구자로 뤼멜(R.J.Rummel)을 들 수 있다. 뤼멜에서

30) Johan Galtung,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V, pp. 437-438(1971).

31) 쟁하스, 앞의 글, p. 54.

32) Dieter Senghaas, "Conflict Formation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0, no. 3(1973), pp. 163-184; 조현석 위의 글.



분야연구에 독창적인 학문적 기여를 해온 자유주의 평화 이론가라 할 수 있는 럼멜은 갈등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의 국제적 속성과 갈등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이론편화하였으며, 평화증진의 규범적 명제로 '자유'의 증진(Promote Freedom)을 제시하였다. 그는 1975년에서 1981년에 걸쳐 전5권의 대작 『갈등과 전쟁의 이해』(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을 출간함으로써 평화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sup>33)</sup>

따음으로 1980년대 신 냉전시기의 평화연구의 주요 흐름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978년 뉴욕에서 열린 제1차 유엔 군축특별 총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고 1980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무력침공으로 미·소간 '전략무기회담'(SALT)이 중단되고 지난 10년 가까이 누려왔던 데탕트 분위기가 깨지면서 신 냉전시기가 시작되었다. 핵위기의 공포와 위협이다. 부각되는 가운데 이 시기의 평화연구는 핵과 군축문제 그리고 기존의 군사안보에 기초한 절대안보 개념에 대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전환 모색, 군축교육 및 반전 평화 교육의 확산 등이 중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평화화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의 후원아래, 대학 학부과정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확산 되었고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

33) R.J. 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UCW)*, Vol.1: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Field*(Beverly Hills: Sage, 1975).

UCW, Vol.2: *The Conflict Helix*(Beverly Hills: Sage, 1976).

UCW, Vol.3: *Conflict Perspective*(Beverly Hills: Sage, 1977).

UCW, Vol.4: *War, Power, Peace*(Beverly Hills: Sage, 1979).

UCW, Vol.5: *The Just Peace*(Beverly Hills: Sage, 1981).

## 24 | 국제평화 창간호(2004. 12)

상대국가를과의 공존공영을 통해서만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6)</sup> '상호안보'는 고르바초프의 소련국방정책에 대한 수정과 1986년 '유럽 안보 협력 협의'의 스톡홀름 선언 채택 등으로, 종래적 대적인 양 진영간의 안보전략과 개념의 수정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1987-1989년 미국 브라운 대학의 「외교정책발전연구소」와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 캐나다 연구소」가 공동연구 결과로 「상호안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상호안보는 "각자가 상대방의 안보를 감소시키거나 저해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결국 자국이나 자기 진영의 안보는 타국이나 타진영의 안보를 똑같이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 3. 탈냉전시대(1990-현재)

1989년 12월 2일 지중해의 몰타(Malta)섬에서 미·소 정상 간에 동서냉전 종결이 선언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탈냉전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미 같은해 2월 15일 아프카니스탄 주둔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11월 9일에는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므로서

36) Bjorn Moller, *Common Security and Non-Offensive Defense: A Non-realist perspective*(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2), pp. 28-30; Olof Palme,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Common Security: A Blue Print for Survival*(NewYork: Simon and Schuster, 1982).

37) Ricard Smoke and Andrei Kortunov(eds.), *Mutual Security: A New Approach to Soviet-American Relations*(NewYork: St. Martin's Press, 1991); 한용섭, 앞의 글, p. 216.

구소, 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는 많은 평화관련 연구소들이 1984년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설립되었다. 1980년에는 유네스코 주최의 '평화, 군축 교육 세계회의'가 개최되어,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결합 등 군축교육의 원칙들을 확인하였다.<sup>38)</sup> 기존의 절대 안보 개념은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상호안보(mutual security)로 전환이 모색되었다. 그동안 국가간의 무한한 군비경쟁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현상'을 낳았다. 안보딜레마란, '한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매우 합리적인 동기에서 군사력 건설을 시작하지만, 다른 국가도 역시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군사력 건설을 계속한다. 이 작용-반작용적인 군비경쟁의 결과 어느 국가도 군비경쟁시작 전보다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sup>39)</sup> 사실 미·소간의 군비경쟁은 1987년에 그 절정에 달했다.

결국 절대 안보에 기초한 군사력 증진만으로는 개별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소련의 몰락에서 보듯이 과도한 군비지출은 경쟁국의 경제체제를 약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1982년 「유엔 군축과 안보문제에 관한 독립적 위원회」(UN Palme Commission)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안보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 '공동안보'와 '상호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공동안보는 "어떤 한 국가도 그 자신의 군사력에 의한 일방적 결정, 즉 군비증강에 의한 억지만으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직

38) 김명섭, 앞의 글, p. 140.

39) John Herz, *International Politics in Atomic Ages*(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p. 231-235; 한용섭, 앞의 글, p. 215.

1990년은 탈냉전시대 원년이 되었다.

사회주의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미·소간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구도는 사라지게 되었고 미국은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이에 동조하는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협조에 의한 평화'(Pax Consortia)체제라는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점차 EU와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가시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시대가 출범하자 바로 1991년 1월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걸프전쟁이 발발하였다. 걸프전쟁 이후의 국제사회는 인종, 민족, 종교, 식 갈등에 따른 분쟁 이 외에 빈곤, 기아, 인권탄압, 환경오염, 자원고갈,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확산, 국제범죄와 테러리즘, 신종전염병의 창궐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급속히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별국민국가(Nation State)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중요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평화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평화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군사적 측면 중심의 안보 문제가 그 내용과 방향에 있어 비군사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으로 재검토되었다. 기존의 국가안보에 대응하는 개인안보, 인간안보, 정치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환경안보, 자원안보, 식량안보, 문화안보 등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sup>38)</sup> 또한 기존의 군사안보 영역도 1980년대의 상호안보, 공동안보 이외에 협력

38) 김명섭, 앞의 글 p. 141.